

규제개혁

2000년

경제도약의 약속, 규제개혁!



# 목 차

## 현장의 목소리

베드타운에서 워킹타운으로! 도시가 변신해요 (서운일반산업단지 가기목 대표)	12
공장 사이 연결통로로 7,000억 투자 열렸어요! (서울반도체 김성주 총무실장)	13
공장증축 후 수출이 280%나 늘었어요! (세대산전 이홍근 대표)	14
친환경 풍력개발에 순풍이 불니다! (의령풍력(주) 서달식 차장)	15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 쏘다 (해태 철원공장 김원진 부문장)	16
공장 마련, 부담이 확~ 줄었죠 (우창TPS 최제화 대표)	17
부담금이 면제돼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였어요~ ((주)경희산업 윤영탁 소장)	18
연대보증 걸림돌이 사라지니 경영도 신바람 나요~ ((주)에이스골프 김영준 대표)	19
카드수수료가 줄어 한시름 났습니다~ (럭키슈퍼 성영기 대표)	20
손님도 늘고, 포장 비용도 아끼고~ (수영닭집 백남구 대표)	21
손님은 편해서 좋고, 우리는 매출이 늘어 좋아요~ (해밀떡집 김성훈 대표)	22
연 300만원에 달하는 인세비용을 아끼게 됐습니다 ((주)동해샘물 김성수 대표)	23
온라인으로 발급하니 일손도 덜고, 편하고~ ((주)금호전력 김선일 부장)	24
신고절차 생략하니, 고부가가치가 175억원! (대한항공)	25

## 1. 투자활성화

001.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도 보세운송특례 적용 (관세청, '15.12.)	28
002.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산림청, '15.11.)	29
00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환경부, '15.10.)	30
00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규제 완화 (국토부, '15.9.)	31
005.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도입 (산업부, '15.7.)	32
006. 에너지절약전문 (ESCO)기업 성과확정계약제도 도입 (산업부, '15.7.)	33
007.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환경부, '15.6.)	34
008.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개선 (문화재청, '15.6.)	35
009.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규제 개선 (국토부, '15.6.)	36

010. 비제조업체 기준건축면적을 완화 (산업부, '15.4.)	37
011. 도시공원 활용 규제 완화 (안산시, '15.4.)	38
012. 대형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기재부, '15.3.)	39
013.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 (중기청, '15.3.)	40
014.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허용 (산림청, '15.3.)	41
015.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능한 상한 단축 (국토부, '15.1.)	42
016. 주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인하 (국토부, '15.1.)	43
017. 상수원 영향이 적은 업종의 공장설립 허용 (환경부, '14.12.)	44
018.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국토부, '14.12.)	45
019.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국토부, '14.12.)	46
020.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중복 규제 완화 (산림청, '14.12.)	47
021.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 제조 허용 (환경부, '14.11.)	48
022.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허용 (국토부, '14.11.)	49
023.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부지면적 하한 폐지 (국토부, '14.11.)	50
024.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제한 완화 (국토부, '14.10.)	51
025.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규제 완화 (국토부, '14.10.)	52
026.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해양시설은 자체 폐수처리 허용 (해수부, '14.9.)	53
027. 수목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산림청, '14.9.)	54
028.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산업부, '14.8.)	55
029.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산업부, '14.8.)	56
030.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자격 기준 완화 (해수부, '14.7.)	57
03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공업지역 개발 가능 (국토부, '14.6.)	58
032. 주택의 규모제한 및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폐지 (국토부, '14.6./'14.12.)	59
033.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 (안전처, '14.6.)	60
034.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환경부, '14.1.)	61
035.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문체부, '16.3.)	62
036.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국토부, '16.3.)	63
037.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 제한 완화 (농식품부, '16.1.)	64
038. 토지 인허가절차 신속처리 도입 (국토부, '16.1.)	65
039. 300억 이상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기재부, '15.12.)	66
040.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국토부, '15.12.)	67

# 목 차

041. 인접 산림지역 개발제한 폐지 (산림청, '15.11.)	68
042. 개발제한구역 버스차고지 내 자동차 종합정비시설 허용 (국토부, '15.9.)	69
043.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허용 (국토부, '15.8.)	70
044. 공원점용허가 규제 완화 (국토부, '15.8.)	71
045.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15.7.)	72
046. 민간투자 사업범위 확대 및 여건 개선 (기재부, '15.5.)	73
047. 도로 사선 제한 폐지 (국토부, '15.5.)	74
048.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환경부, '15.3.)	75
049.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입지 규제완화 (국토부, '15.3.)	76
050. 원폐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 (환경부, '14.11.)	77
051.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 (국토부, '14.11.)	78
052. 입주업종 제한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시, '14.10./'15.2.)	79
05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진입도로폭 기준 완화 (국토부, '14.7.)	80

## 2. 신산업 창출 지원

054.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 (관세청, '15.9.)	82
055.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해수부/식약처, '15.8.)	83
056.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구분 명확화 (식약처, '15.7.)	84
057.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 (기재부, '15.6.)	85
058. 산업융합제품 등 신기술제품 공공판로 지원 (조달청, '15.6.)	86
059.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국세청, '15.5.)	87
060. 식용 양식해마 식품원료 사용 (식약처, '15.2.)	88
061.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규제 완화 (행자부, '14.12.)	89
062.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관세청, '14.8.)	90
063.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8.)	91
064. 카세어링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카세어링 활성화 (국토부, '14.7./'14.11./'15.12.)	92
065. 소방신제품 시장 출시 기회 확대 (안전처, '14.7.)	93
066. 수출용 치아미백제에 대한 수입국 기준 적용 (식약처, '14.7.)	94

067. 자동차 튜닝규제를 개선하여 튜닝산업 활성화 (국토부, '14.6.)	95
068.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 (식약처, '14.4./'14.8.)	96
069. 핀테크 기업 등 외화이체업 가능 (기재부, '16.3.)	97
070.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농식품부, '16.1.)	98
071.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확대 (농식품부, '15.6.)	99
072.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완화 (복지부, '15.5.)	100
073.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폭 규제 완화 (국토부, '15.5.)	101

### 3.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074. 정보보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체계 구축 (미래부, '15.12.)	103
075. 특허 무상개방 활성화 (특허청, '15.11.)	104
07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기간 완화 (식약처, '15.10.)	105
077.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식약처, '15.9.)	106
078.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기청, '15.8.)	107
079.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도입 (법무부, '15.7.)	108
08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분류기준 완화 (환경부, '15.7.)	109
081.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활용한 창업환경 조성 (해수부, '15.7.)	110
082. 소방시설업 One-stop 민원처리 (안전처, '15.7.)	111
083. 의료기기 무균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 (식약처, '15.7.)	112
084. 상업용 지도 제작업체의 심사 부담 경감 (국토부, '15.6.)	113
085.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시장 진입완화 (금융위, '15.6.)	114
086. 가구원자재 수입자명 번들단위 표기 허용 (산림청, '15.6.)	115
087. 중소기업 M&A 특례대상 확대 (중기청, '15.5.)	116
088.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온라인 제출 (식약처, '15.5.)	117
089. 위해도 낮은 전자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면제 (미래부, '15.3.)	118
090. 사업장 폐기물 인수·인계 내역 입력기한 연장 (환경부, '15.3.)	119
091.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 '15.3.)	120
092. 창업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중기청, '15.2.)	121

# 목 차

093. 장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고용부, '15.2.)	122
094. 벤처·창업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준 완화 (중기청, '15.2.)	123
095. 기업 부채비율에 따른 정부 R&D 참여 제한 폐지 (미래부, '15.1.)	124
096.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중기청, '15.1.)	125
097.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중기청, '15.1.)	126
098.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중기청, '15.1.)	127
099.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받은 기업의 '벤처기업' 허용 (중기청, '15.1.)	128
100.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기준 완화 (환경부, '14.12.)	129
101. 개인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 폐지 (중기청, '14.12.)	130
102. 의료기기 전파관련 인증기준 단일화 (미래부, '14.11.)	131
103.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절차 간소화 (식약처, '14.10.)	132
104.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중복신고 개선 (고용부/국세청, '14.9.)	133
10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문체부, '14.7.)	134
106.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갱신기간 확대 (중기청, '14.7.)	135
107.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특허청, '14.6.)	136
108.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 (중기청, '14.5.)	137
109. 휴업·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중기청, '14.5.)	138
110. 청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고용부, '14.4.)	139
111. 중소기업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 (특허청, '14.3.)	140
112. 우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금융위, '14.2.)	141
113. 창업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미래부, '14.1.)	142
114.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고용부, '14.1.)	143
115.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금융위, '14.1.)	144
116. 창업지원사업 서류 표준화 (중기청, '16.3.)	145
117.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복지부, '16.2.)	146
118.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농식품부, '16.1.)	147
119.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기재부, '15.12.)	148
120.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완화 (기재부, '15.12.)	149
121.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관세청, '15.12.)	150
122. 의료기기 영업자의 휴·폐업 신고절차 간소화 (식약처, '15.7.)	151
123. 측량업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의무 폐지 (국토부, '15.6.)	152

124. 대학·연구기관 실험실공장의 면적제한 폐지 (중기청, '15.5.)	153
12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 분야) 등록요건 완화 (환경부, '15.2.)	154
126. 산업단지 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기숙사 허용 (국토부, '14.11.)	155

#### 4.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27. 와이파이 전자파 흡수율 시험방법 간소화 (미래부, '15.11.)	157
128. 벌채 후 수목재배로 복구를 대체 (산림청, '15.11.)	158
129. 산지 방목지 내 사료식물 재배 허용 (산림청, '15.11.)	159
130.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억울한 과징금 감면 (여가부, '15.10.)	160
131. 개발제한구역 내 경량판넬 설치 완화 (국토부, '15.9.)	161
132. 고급택시 허용 기준 완화 (국토부, '15.9.)	162
133. 포장육의 재포장일자 표시방법 명확화 (식약처, '15.9.)	163
134. 식품분야 무작위표본검사 민간검사기관으로 확대 (식약처, '15.8.)	164
135. 수박의 신선도 측정기준인 T자형 꼭지관행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농식품부, '15.6.)	165
136. 현황도로 등을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 (산림청, '15.4.)	166
137. 쌀 수출 추천서 제도 폐지 (농식품부, '15.3.)	167
138. 농업인 맞벌이 부부자녀 어린이집 입소절차 개선 (복지부, '15.3.)	168
139. 소규모 맥주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기재부, '15.2.)	169
140. 선도농가실습 자격을 귀농인에서 청년까지 확대 (농진청, '15.1.)	170
141.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금융위, '15.1.)	171
142.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제도 실시 (중기청, '15.1.)	172
143.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간소화 (산림청, '14.12.)	173
144. 개발제한구역 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허용 (국토부, '14.11.)	174
145. 개별포장 안 해도 닭·오리고기 판매 허용 (식약처, '14.10.)	175
146.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허용 (식약처, '14.10.)	176
147.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고용부, '14.9, '14.10.)	177
148.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제한 완화 (국토부, '14.8.)	178
149. 약국관리시 위생복 착용·명찰 패용 폐지 (복지부, '14.7.)	179

# 목 차

150. 해외직구시 목록통관대상 품목 전면허용 (관세청, '14.6.)	180
151. 하우스 내 화훼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 (국토부, '14.5.)	181
152. 산림휴양시설인 '치유의숲'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지정 (문체부, '15.12.)	182
153. 식품접객업의 시설분리 의무 완화 (식약처, '15.12.)	183
154. 자연산물 용기포장시 스티커 사용 허용 (식약처, '15.12.)	184
155. 의약품과 비의약품 구별 진열 의무 폐지 (식약처, '15.9.)	185
156. 가구거리 지정기준 완화 (산업부, '15.6.)	186
157.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 (농식품부, '15.1.)	187

## 5. 국민 불편·부담 개선

158. 경찰민원 One-stop처리시스템 구축 (경찰청, '16.1.)	189
159. 말기암환자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허용 (복지부, '15.12.)	190
160. 궁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 지역 개방 확대 (문화재청, '15.11.)	191
161.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농식품부, '15.10.)	192
162.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 (복지부, '15.9.)	193
16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행정보시스템(Tour-PASS) 구축 (관세청, '15.9.)	194
164.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 허용 (환경부, '15.8.)	195
165. 차량 내 자동차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국토부, '15.8.)	196
1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액 납부방식 등 개선 (교육부, '15.5.)	197
167. 글로벌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 환경 마련 (금융위, '15.5.)	198
168.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를 통한 이용자보호 (미래부, '15.4.)	199
169.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 완화 (고용부, '15.4.)	200
170.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용자요건 완화 (고용부, '15.4.)	201
171.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복지부, '15.4.)	202
172. 주택 청약 절차 간소화 및 선택권 확대 (국토부, '15.2., '15.6.)	203
173.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 (교육부, '15.1.)	204
174.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복지부, '15.1.)	205
175. 범죄경력조회서 영문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 (경찰청, '15.1.)	206

176. 사내대학 학칙 개정시 보고의무 폐지 (교육부, '14.12.)	207
177. 입학 전 경력을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교육부, '14.12.)	208
178.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 단축 (국토부, '14.12.)	209
179.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연비 관리제도 통합 (국토부, '14.11.)	210
180.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식약처, '14.11.)	211
181.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채취 갱신기간 연장 (산림청, '14.11.)	212
182. 자동차정비업 표준공임제 도입 (국토부, '14.10., '14.12.)	213
183.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국토부, '14.10.)	214
184.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기재부, '14.9.)	215
185.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고용부, '14.9.)	216
186.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 보관창고에 화장실 설치 허용 (국토부, '14.9.)	217
187. 도시가스요금 카드 납부방식 확대 (산업부, '14.8.)	218
188.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복지부, '14.8.)	219
189.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관세청, '14.7.)	220
190.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고용부, '14.6.)	221
19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경찰청, '14.6.)	222
192.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교육부, '14.5.)	223
193.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 폐지 (경찰청, '14.3.)	224
194. 승합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정 (국토부, '16.상반기)	225
195. 수영장 이용자 불편 해소 (문체부, '16.2.)	226
196.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국토부, '15.12.)	227
197.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확대 (미래부, '15.10., '16.1.)	228
19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을 완화 (교육부, '15.9.)	229
19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고용부, '15.7.)	230
200.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립시 지원요건 완화 (고용부, '15.4.)	231





# 현장의 목소리

규제가 풀리니 신바람 납니다.  
불편은 속 시원히 사라지고  
일터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규제개혁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베드타운에서 워킹타운으로! 도시가 변신해요

(서운일반산업단지 가기목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지만 주거단지외밖에 활용할 수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주변에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인천공항을 이용한 항공편 및 아라뱃길을 이용한 선박편도 있어 산업단지로 적격인데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죠.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개선으로 상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며 자립자족 도시를 위한 활로가 열렸습니다. 계양구 서운동 16만 평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던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도 산업단지와 연계해 운영한다면, 문화시설을 서울에 의존하던 지역불균형도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경제유발 1.4조원  
고용창출 8,000여명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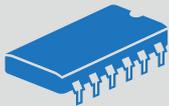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



• 민간 출자비율 완화(1/2-2/3), 상업시설로 용도지역 변경 허용, 임대주택 용지 미매각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 허용, 개발계획 변경 간소화 등(국토교통부)

저희 회사는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원시공원이 있어 공장 간 물품이송과 설비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장 사이에 연결통로 설치허가를 위해 6년 전부터 노력해왔지만 각종 규제에 부딪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선추진단과 안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서 6년 만에 결국 연결통로 설치허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 글로벌 LED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7,000억원  
고용 2,000여명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공적 시설만 가능한 공원점용허가 규제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공원 일부해제

▶ 생산 및 R&D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7,000억원 투자와 최대 2,000명 고용창출 기대(국토교통부)

공장 사이 연결통로로 7,000억 투자 열렸어요!

(서울반도체 김성주 총무실장)





## 공장증축 후 수출이 280%나 늘었어요!

(세대산전 이홍근 대표)

공장과 창고를 늘리기 전까진 주문이 밀려들어와도 수출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어요. 소화가 안 된 물류를 아웃소싱하자니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사업을 그만둘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공장 부지가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건폐율이 20%로 낮춰진 게 원망스러울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제 걱정 없습니다.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지한 공장들은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게된 덕분에 큰 매출상승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1차 증설 이후 수출만 하더라도 전년대비 280%, 229만달러에서 720만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인원도 65명에서 85명으로 추가 채용했어요. 규제개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일이었겠죠. 앞으로 2차 증설계획이 실행되면 미국 내 계약점포 수 2,300개 이상, 매출액 4조원을 기대합니다.

229만 달러

720만 달러

녹지·관리 지역 수출증대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준농림지역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입지규제가 강화되어 기존 공장의 증축이 곤란
-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기존 공장에 대해 '16년까지 기존 부지내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20%→40%로 완화(국토교통부)



## 친환경 풍력개발에 순풍이 불니다!

(의령풍력(주) 차장 서달식)

환경 살리는 풍력발전인데, 입지규제로 인해 수년째 첩바퀴만 돌아서 답답했습니다. 산지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3만㎡ 미만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보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지요. 바람이 쌩쌩 부는 산지의 풍황을 전혀 활용할 수 없으니 아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 풍력발전시설을 10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481억 정도의 투자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도 150명 가량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15.75mw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전체 8천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면 풍력발전 업계의 기술도 축적되고 온실가스 감축까지 거둘 수 있으니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규제개선인 셈입니다. 앞으로 국내 풍력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 돼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길 기대합니다.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을 3만㎡ 미만으로 제한
- 😊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3만→10만㎡ 이하로 완화(삼림청)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꿈도 못 꿰었습니다. 먹는샘물 제조공장엔 먹는샘물을 만드는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 탓에, 탄산수를 생산하려면 추가공장을 지어야 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국산 탄산수들은 인기가 늘고 있는데 국산 제품은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었죠. 그런데 규제가 개선되며 저희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탄산수 추가공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 1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고, 탄산수 추가생산으로 30~40%의 매출액 증대가 예상됩니다. 규제가 풀리며 탄산수 시장도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의 상품 선택 폭도 늘게 됐으니 참 반가운 규제개혁이지요.

150억원

**비용절감**



20억원

탄산수 제조시설비용  
130억원 절감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 •먹는샘물 등의 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설치 금지
- 😊 •먹는샘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수 제조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환경부)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푯! 쏜다**

(해태 철원공장 김원진 부문장)





## 공장 마련, 부담이 확~ 줄었죠

(우창TPS 최제화 대표)

지난 2012년에 창업해 올해 초에 처음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공장처럼 규모가 큰 부분에 투자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 초기기업 경우에는 자금 상황이 더 어렵죠. 이런 와중에  
 공장설립 부담금을 내야 해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는데 규제가 개선돼 너무  
 기쁩습니다. 덕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00만원을 면제 받아 자금회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3개 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 3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중소기업청)

2011년에 창업한 뒤 올해 공장을 넓히게 됐습니다. 창업 후 처음 공장을 지을 때에만 부담금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해서 안타까웠어요. 창업한 지 5년밖에 안돼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공장도 넓히고 게다가 부담금도 내야 하니깐요. 다행히 규제완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00여만원과 개발부담금 5,000만원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돼서 다행이에요.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창업기업 공장신설 시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부담금 면제를 받으나 공장증설 시에는 제외



•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허용해 부담금 면제 혜택 부여(중소기업청)

부담금이 면제돼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였어요~

((주)경희산업 윤영탁 소장)





# 연대보증 걸림돌이 사라지니 경영도 신바람 나요~

(주)에이스골프 김영준 대표

우수기술창업자로 지정돼 재창업 시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받았습니다. 사실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은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심적 부담감도 커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연대보증 때문에 형제와 처가식구들에게 피해를 줬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어 그 부담감을 압니다. 이번에는 소신껏 경영에 매진해 올 상반기 매출만도 작년 전체 매출과 맞먹을 정도고, 연말까지 10배가량 늘 겁니다.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법인 창업시 보증지원을 받을 때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이 필요해 창업자에게 부담



• 기술력을 가진 우수기술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면제 (금융위원회)



## 카드수수료가 줄어 한시름 났습니다~

(럭키슈퍼 성영기 대표)

매출액의 40%가량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데 연 매출액이 2억원이 넘는다고 우대수수료를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상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이거든요. 규제개선으로 카드회사에 따라 많게는 1% 가까이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돼서 다행입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이 늘어난 만큼 담배 마진율 특수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애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를 적용
- 
 • 연 매출액 2억~3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금융위원회)

닭을 하나씩 포장해서 두면 눈에 잘 띄지 않아 고객들이 닭을 판매하는지 잘 모르더라구요. 이제 개별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포장 없이 냉장 진열대에 넣어 판매하니 유동고객들의 구매율이 높아져 매출도 25%나 올랐거든요. 게다가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 년에 500만원가량 아낄 수 있게 됐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이지요. 사소한 애로 해결 같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25% 증가**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개선 후**

**개선 전**

**₩ 매출**

-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함
- 전통시장 내 닭·오리 식육 판매업소가 위생요건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

손님도 늘고, 포장 비용도 아끼고~

(수영닭집 백남구 대표)



손님들이 쿼이나 택배로 떡을 배달해달라고 할 때마다 속을 끓였습니다. 아내와 둘이 운영하다보니 늘 일손이 부족해 배달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배달 때문에 종업원을 둘 수도 없으니 손님은 손님대로 불만이고 저희는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속상했죠. 이제 직접 배달하지 않고 쿼이나 택배로도 팔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 정말 기쁩니다. 개선 후 한 달 매출이 40%나 올라 장사할 맛이 절로 나네요.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은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해 원거리 지역 판매가 불가능



• 즉석판매식품(떡, 빵, 참기름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

손님은 편해서 좋고,  
우리는 매출이 늘어 좋아요~

(해밀떡집 김성훈 대표)





## 연 300만원에 달하는 인쇄비용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주)동해샘물 김성수 대표

'먹는샘물' 표시가 수질을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를 인쇄하느라 적지 않은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하니 안타까웠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덕분에 매년 증명표시를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300여만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도 좋지만 심리적인 부담감도 덜게 돼 마음이 가볍습니다.

300여만원

'먹는샘물'  
표시 인쇄비



비용절감

0만원

인쇄의무폐지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먹는샘물 판매량을 파악하기 위해 병마개에 '증명표시' 인쇄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해 인쇄비용 부담 가중



• 병마개 '증명표시' 부착 의무 폐지(환경부)



## 온라인으로 발급하니 일손도 덜고, 편하고~

(주)금호전력 김선일 부장

공공기관 입찰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멀리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등기발송한 후에 심사를 기다렸다가 확인서를 받았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그날 바로 발급이 가능해 너무 편해졌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도 아끼고 일손도 덜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네요.



시간 절약 간편한 절차  
온라인발급시스템 효과

###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하고, 증빙서류도 개별 지원기관마다 오프라인으로 중복 제출해야 함



• 용도에 제한 없이 범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중소기업청)

항공사 입장에서 화물 처리 시간 절감은 곧 경쟁력인데 그동안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매번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신청한 뒤에 항공사와 운송회사가 반입·보세운송·반출 신고를 하고, 이후 반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낭비가 있었죠. 이번 규제개선으로 적하목록을 신청할 때 환적화물이라고 신고만 하면 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릅니다. 과거엔 5~6시간 걸리던 작업이 3시간으로 줄어 당일 연결환적이 가능해졌고 이 효과가 막대합니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환적 물동량이 3천 톤까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 175억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고 있어요.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서 대한민국 공항의 경쟁력이 대폭 커진 것입니다.

**175**억원  
부가가치 창출

• 규제개선 Before & After •

- ☹️ 김포공항 도착 환적화물은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해야만 인천공항으로 이동 가능
- 😊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입항시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면 반출입 신고와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관세청)

신고절차 생략하니, 고부가가치가 175억원!

(대한항공)



## 규제개혁 현장사례 200선

---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일반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민생 중심·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규제개혁 신문고를 열고, 국민 불편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대통령주재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치우고 투자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신산업 창출의 길도 열었습니다.

서민경제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도 뽑았습니다.  
국민 불편은 줄이는 한편, 사회 안전은 강화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에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규제가 바뀐 만큼 국민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그간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에서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 200선을 소개합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알면 힘이 되는 규제개선 사례들을 만나보세요.

더 많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규제개혁은 달리고 있습니다.



# 1

## 투자 활성화

“기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기업 활동을 위해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습니다.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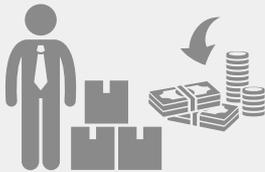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도 보세운송특례 적용

자유무역지역에서도 누리는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혜택!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받던 특례, 경제자유무역지역에서도 적용해줄 수 없나요?” 반도체 제조수출업체인 S사는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공장 특례를 받아 보세운송 신고·수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간소화된 화물 반출입으로 원활한 생산·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립한 공장에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원자재 조달 및 외주 가공을 위해선 빈번한 화물 반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S사의 걱정은 컸습니다.

이제 S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간소화 혜택을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로서 365일 24시간 생산체제로 운영되는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수출경쟁력도 향상됐습니다.



**현장 체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반도체 제조 C사  
연간 운송·보관료 등 약 41억원 절감


**개선 전**

•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간 보세운송특례 (6단계→3단계) 미적용


**개선 후**

•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간 보세운송 특례 적용으로 신고절차 간소화(6단계→3단계)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5.12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06)

 관세청

# 002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 경사도제한 완화하니 산비탈에 막혔던 사업이 탄탄대로!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이 가파른 산인데, 경사도제한을 따르려면 애초에 개발을 할 수 없는 노릇이네요” 관광단지조성 사업 추진 중 난관에 빠진 G사의 불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한 W시의 계획에 맞춘 사업임에도, 확실적인 경사도제한에 부딪힌 것입니다. 경사도제한이란 산지전용 대상 지역을 100㎡로 분할하여 각각의 개소 평균경사도가 25도이상인 지역이 40% 이하가 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W시처럼 산지경사가 급한 지역에선 산지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관광특구 조성에 대한 W사와 G사의 숙원이 풀렸습니다. 산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던 획일적인 경사도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지구 지정 시 산림청과의 협의를 거쳐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경사도 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파른 산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 현장체감



원주 관광단지 3,600억원 규모로  
투자 추진 중

#### 개선 전

• 산지전용허가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인 경우 가능

#### 개선 후

• 지역·지구 지정시에 경사도가 협의된 경우,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 지역이 전체 40% 이상이라도 개발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00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 오염방지시설은 신규부지에만! “애매한 규정,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비점오염원\*방지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가 애매해 설비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내려주십시오.” 여수산단에 위치한 A사는 공장증설을 위해 인접부지를 매입하며,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 공장부지와 신규부지 사이가 하천을 경계로 공장등록부상 분리돼 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구 부지와 신규 부지에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아닌지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입니다.

✓ A사의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에 부지의 지형 특성을 확인한 결과, 신축 부지 한 곳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규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기업 애로현장에 적극 찾아가는 규제개혁으로, 부지공간 활용은 물론 설치비용 부담과 설비투자 지연문제가 일거에 해소된 셈입니다.

\*비점오염원 :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에 의해 불특정장소에서 유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



### 현장체감



A 공장의 경우 기존부지 내 지하 저감시설 설치비용 약 20억원 절감

### 개선 전

- 폐수배출시설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 부지에 대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 개선 후

- 폐수배출시설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지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장등록부상 분리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 시달 ('15.10월)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

# 00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 주유소도 더 편리하게 변신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유소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한 A씨는 애초 예상과 달리 매출이 갈수록 떨어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A씨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유소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소매점이나 자동차 정비시설을 설치하려고 관련 법령을 알아봤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에는 세차시설 외에 다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규제가 풀리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유소와 충전소에도 소매점 및 자동차 정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유소 내에 정비소와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개선 전에 비해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 현장체감



개발제한구역 입주 주유소 등의 운영 및 이용자 불편 해소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허용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자동차용 LPG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세차시설→자동차정비시설·소매점으로 확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9월)

# 005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도입

## 직장, 식당, 문화시설이 한 곳에! 산업단지가 편리해졌어요

산업단지 내의 IT업체에 근무하는 D씨는 눈발이 날리는 겨울이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일이 곤욕입니다. 전국의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IT업종 관련 사업장이 입주하는 '산업시설구역', 편의·문화시설이 입주하는 '지원시설 구역', 관공서 등이 입주하는 '공공시설구역', 공원 등이 조성되는 '녹지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규모가 큰 산업 단지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 간의 거리가 멀어 식당이 회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산업단지 내의 용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복합구역에는 한 건물 안에 기업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므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업종간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512억원 규모 사업 추진중

#### 개선 전

- 산업단지 내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이 구역별로 분산 입주 가능

#### 개선 후

- 하나의 산업단지 내에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도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15.7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1)

산업통상자원부  
MOT E

# 006

에너지절약전문(ESCO)기업 성과확정계약제도 도입

## ‘성과확정계약’ 덕분에 에스코 투자 받기 쉬워졌어요!

☞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A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노후 가로등, 보안등을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ESCO투자사업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ESCO 투자사업은 A사가 자금을 선투자한 후, 에너지절감액 만큼 지자체로부터 매달 투자금을 분할 상환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A사는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금융부담이 있는 성과보증계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성과확정계약’ 제도가 신설되면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부채율을 낮추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 체감



‘15년 8.7억원 수준의 ESCO 성과확정계약 신청



### 개선 전

- ESCO 기업은 금융부담이 있는 성과보증계약만 가능



### 개선 후

- ESCO 기업에 선투자 등 금융부담을 감소시킨 성과확정계약 제도 도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15.7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1)



산업통상자원부  
MOTIE

# 007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 공해 없는 청정에너지 ‘수상태양광’ 시대 열린다!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면 연간 2781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1300t의 CO2 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데 환경훼손 우려로 착공이 오리무중이니 답답합니다.” K-water 관계자의 말입니다. K-water는 비상수원보호구역인 충남 보령댐에 수상태양광 건설을 하려 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한 규제를 제시한 환경부의 의견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은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 최근 K-water는 충남 보령댐 수상태양광발전 준공을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업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합의점 도출에 나선 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덕분입니다. 협의에 따라 수질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모니터링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세계최대규모 수상태양광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64억원 투자 ('16.2월 완공)

#### 개선 전

- 비상수원 보호구역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 불허

#### 개선 후

- 비상수원 보호구역 댐에서의 수상태양광 개발 허가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15.6월) 및 협의완료('15.7월)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044-201-7292)



# 008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개선

## 산등성이 너머 공장 지어도 문화재 주변경관엔 이상 無!

☞ “산등성이 너머 반대편에 공장을 세우는 게 문화재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까?” 수도권에서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L씨의 의문입니다. L씨는 공장을 세우기 위해 사들인 토지가 유적지 경관 보호를 위한 ‘원지형보존’구역으로 설정돼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군청 직원의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신축하려는 공장 산등성이 너머에 선사유적이 있기에 공장설립과 유적지 경관은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 L씨와 같이 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받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각 시·군·구청과 협력하여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제한 기준을 '15년 7월부터 '17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A씨와 같이 산등성이 너머로 문화재가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높이 제한을 해소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현장체감



문화재주변지역 2,400km<sup>2</sup> 중 800km<sup>2</sup>의  
높이 제한 완화

#### ☹ 개선 전

- 문화재 주변 건물 신축을 일률적으로 규제  
(원지형보존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제한)

#### ☺ 개선 후

- 문화재 주변 건물 신·증축시 건축제한 기준을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15.6월)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5)

문화재청  
OHARA Heritage Authority

## 009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규제 개선

투자 물꼬 튼 인천자유무역지역,  
글로벌 물류허브로 거듭난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1년 넘게 진출을 타진했으나 녹지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기업 진출이 불가능하다면 무늬만 자유무역지역 아닌가요?” IT기업 J사 대표의 말입니다. 인천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의 배후물류단지로서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을 결합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나 2년이 넘게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1곳에 불과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56만㎡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국내기업은 500㎡ 이하 공장 건립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천자유무역지역에 용지를 조성하고도 규제에 발목을 잡혀 공장을 건립하지 못했던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가 자연녹지부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한 구역으로 교역, 생산, 투자 등 경제활동에서 일부 비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물류기지로 급부상할 것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S사 6,500억원(건축 1,500억, 설비 5,000억)  
투자, 3,000명 고용창출



## 개선 전

• 인천공항 배후 자유무역지역(2단계, 56만㎡)이 성장관리권역 내 녹지지역에 해당되어 기업유치에 한계



## 개선 후

• 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15.6월)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 010

비제조업체 기준건축면적을 완화

## 건물크기·부지면적, 업종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위험물질을 보관하려면 타 사업장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필수인데, 기준건축면적을 맞추려면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합니다” 위험물취급업체 H사 직원의 하소연입니다. 기준건축면적이란 공장의 연면적을 사업부지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 제조업과 달리, 비제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단지 내 공장을 40%이상 지어야 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상 넓은 부지가 필요한 컨테이너 물류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투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 이제 H사는 건축비용 고민도 덜고 위험물질 간의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해 안전사고 걱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한 덕분입니다.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로 비제조업 기업의 투자부담이 줄고 안전은 커졌습니다.



### 현장체감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K기업 등 3개 업체  
설비투자비용 약 293억원 절감

#### 개선 전

-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을 40%로 일률 적용

#### 개선 후

- 전기업·운송업(20%), 폐기물수집운반업(25%) 등은 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기준건축면적을 완화
- ▶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15.4월)

# 011

도시공원 활용 규제 완화

## 공장 사이 연결 통로, 규제 하나 풀었더니 7000억 투자!

“저희 회사는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제 1공장과 제 2공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두 공장 간 직선거리는 180m에 불과한데, 연결통로가 없어 직원들은 1.2km나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S반도체 대표가 털어놓은 고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목적이 아닌 시설물도 공원 지하 1.5m이상 깊이에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고쳤지만 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덕형태의 공원 특성상, 공원을 관통하는 지하 운송통로를 설치하면 양쪽 끝 일부가 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S반도체는 운송통로 설치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결통로를 내리는 일부 공원부지만 공원지역서 해제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숙원사업을 이룬 S반도체는 2019년까지 고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투자도 40% 확대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향후 5년간 약 7,000억원 투자와 최대 2,000명 고용창출 기대

#### 개선 전

-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 설치 불허

#### 개선 후

- 반월산단 내 S반도체 1· 2공장 사이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 설치를 허용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5.4월)

안산시 시민공원과 (031-481-2710)



# 012

대형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 대한민국 증권사, 세계로 쪽쪽 뻗어나간다!

“외화대출을 수반하는 신디케이트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등에 참여할 수 없으니 투자은행으로서 활동 제약이 큼니다.” A증권사 직원의 말입니다. A증권사는 해외 PF사업에 진출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업무를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제한돼 국내증권사로선 투자은행 업무를 활성화하기 어려웠습니다.

- 대형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규제개선 이후론 이런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업무가 허용되고 외화차입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입니다. 증권사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대한민국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N증권사 5천만\$ 해외 PF 참여

#### 개선 전

- 외국환은행 이외의 증권사 등 여타 금융기관은 외국환 업무 제한

#### 개선 후

-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관련 신용공여 허용, 외화차입 요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5.3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1)



# 013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

## 핀테크 투자 허용으로 금융 혁신에 날개를 달다!

“전 세계가 핀테크 육성에 나선 시대에, 핀테크기업 투자를 막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요?” 핀테크 분야 창업에 나선 Y씨는 투자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핀테크업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된 현실이 원망스러운 뿐입니다.

이제 Y씨의 회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이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된 덕분입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규제개선으로, 부상하는 핀테크 산업에서 우리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벤처캐피탈에서 핀테크 기업 15개사에 총 359억원 투자

### 개선 전

- 핀테크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

### 개선 후

-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벤처캐피탈의 투자 허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5.3월)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481-4422)



# 014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허용

## 그린벨트지역, 생태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되다!

“아이들 창의력과 정서함양을 위해 유아숲체험에 관심 갖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영 어렵습니다.” 평소 산림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게 꿈이던 C씨의 하소연입니다. 유아숲체험 수요가 많은 도시 근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도시지역은 지가가 높아 엄두가 나지 않고,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있기에 C씨는 답답했습니다.

- 요즘 C씨는 숲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놀이·체험 교육 시설을 꾸미느라 바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설치가 허용된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산림생태환경에 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설치가 보다 쉬워짐에 따라, 유아숲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고 아이들의 숲체험 기회도 늘어날 것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과천, 양주, 창원 유아숲체험원 26억원  
토지구입비 절감으로 유아숲교육 활성화



### 개선 전

- 유아숲체험원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 불가



### 개선 후

- 산림생태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되는 유아숲체험원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3월)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042-481-8869)



# 015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능연한 상한 단축

## 8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지금 살고 있는 35년 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벽면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는 준공 후 40년이 되어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 재건축사업 연한의 상한을 '30년 이하'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다소 쉬워졌으며,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서울)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24만 8천세대)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약 2~10년 정도 단축 효과

#### ☹ 개선 전

-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가능연한을 조례로 규정
- \* 서울시의 경우 연한 상한을 40년으로 설정

#### ☺ 개선 후

-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건축 가능연한을 조례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15.1월)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016

주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인하

##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낮추니 “넓은 동네들이 흰해졌어요”

“주차난에, 겨울철 단열 문제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네요. 도대체 언제 재개발이 된다는 건지 답답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L씨는 동네가 재개발 돼 새 아파트가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합에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만 늘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 최근 L씨와 이웃 조합원들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규제완화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이 폐지되고 상한이 5%p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임대주택 비율만큼 일반 분양을 추가로 늘릴 수 있으니 사업성이 개선되어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인천) 임대주택 의무비율완화(17→0%)로 전체 조합원 1인당 약 1,000만~ 2,300만원 사업성 개선



### 개선 전

- 재개발사업시 전체세대수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 개선 후

-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전체 세대수의 20% 이하→15%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15.1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017

상수원 영향이 적은 업종의 공장설립 허용

## 강가에 한과, 커피 향기 솔솔~ 지역경제 솔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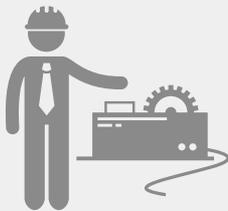
"한과 공장에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데 왜 인허가를 안 해주나요?"  
한과 공장을 설립하려던 A씨는 불만스럽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했으나 상수원 상류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장의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업종까지 일괄적으로 설립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A씨는 생각했습니다.



- 그간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어떤 제조공장도 들어설 수 없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란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과, 떡, 커피 등 폐수가 생기지 않는 업종에 대해선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이 이뤄졌고, 상수원 상류 거주주민들의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 현장 체감



커피가공공장 2개, 빵류 제조공장 1개 등 총 3개 공장설립

#### 개선 전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장의 설치가 불가

#### 개선 후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종은 공장설립 허용

▶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12월)

# 018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 “분양가 상한제 비켜서라!” 주택시장 숨통 틔운다!

“우리 회사가 가진 신기술이 많은데 적용도 못하고, 늘 비슷한 품질의 아파트만 내놓으니 답답하죠.” A건설사 직원의 말입니다. A사는 지진과 풍진을 동시에 제어하는 신기술을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하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가격에 따라 설정된 기본적인 수준의 주택공급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직장인 J씨는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는 터라 원하는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속되며 공급위축·품질저하·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곤란 등 부작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공공택지로만 한정됐고, 민간택지는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15.4~'15.12월 185,682세대에 적용

#### ☹️ 개선 전

-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 개선 후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여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

▶ 「주택법」 개정('14.12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019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 터미널의 융복합 변신은 시민의 즐거움!

“시설이 낡고 편익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S시 시외버스터미널. 이곳을 새롭게 변신시켜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싶지만,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제한적이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으로 영화관, 상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서 S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예식장 등 편익시설을 유치하여 융복합 터미널로 새롭게 변신 중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은 매점·구내식당 등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 설치가 곤란했습니다. 이에 터미널·공공청사 등 융복합이 용이한 14개 도시계획시설에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대폭 허용하여,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현장 체감



사천터미널 약 70억원 투자유치,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통해 확산 예정

#### 개선 전

- 터미널, 도서관 등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화장실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

#### 개선 후

- 도시계획시설 내 면적의 50%까지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 허용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4.12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 020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중복 규제 완화

## 중복규제 폐지하니 지역개발이 빠르고 쉬워진다!

“4천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에 기간도 90일이나 들어 타당성 조사를 또 받으라니 화가 나네요” 경기도 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A씨는 불만스럽습니다. 구역 등 지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협의구역 내 45ha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대규모 개발시 거쳐야 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중복규제로 작용하며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부담을 들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았다면, 산지전용 허가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이뤘습니다. 이로서 불필요한 조사비의 중복 부담 없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15년 14건 4.2억원의 타당성 조사 비용 절감 및 인허가 90일 단축



### 개선 전

- 30만㎡ 이상의 구역 등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는 지정협의시와 산지전용허가시 중복 실시



### 개선 후

- 구역 등의 지정협의시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시 면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4.12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2)



# 021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 제조 허용

##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 쏜다!

“왜 국산 먹는샘물은 맹물만 있고, 탄산수는 없는 거죠? 마트에 가면 외국산들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평소 프랑스산 P 탄산수를 즐겨 마시는 L씨는 의아했습니다. 탄산수의 인기만큼이나 시장도 커지는데 국산 제품을 찾기가 어려우니 말입니다.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을 만드는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제가 제조업체들의 탄산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탄산수 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품 선택의 폭도 넓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2개 업체 탄산수 추가 설비 비용 210억원 절감, 80억원 규모 설비 투자



### 개선 전

- 먹는샘물 등의 제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 설치 금지



### 개선 후

- 먹는샘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수 제조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1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 022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허용

## 갈 곳 없던 전세버스들... 그린벨트 내 공영차고지에 터 잡는다!

“요즘 전세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처 그린벨트 지역을 볼 때마다 저 넓은 곳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전세버스업체 J사 대표의 하소연입니다. J사는 주택지 인근에 위치한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경영난이 심해져 차고지를 옮기려 했으나 지역 내 차고지는 모두 포화상태였습니다. 도심개발로 낡아 토지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 설치되는 차고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J사는 걱정을 놓았습니다. 근처 그린벨트에 공영 차고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영세 전세버스운수 사업자가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활용할 순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은 허용하면서도 차고지 용도의 주차장은 허용하지 않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제개선이 이뤄졌고, 전세버스업계의 임대료 부담도 한 층 덜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차고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인 전세버스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만 허용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4.11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023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부지면적 하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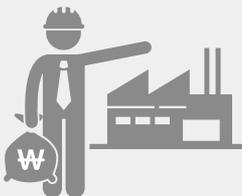
## 이중규제 풀리니, 작은 공장도 증축 가능!

“공해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의 소규모공장 입지제한까지 추가로 적용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험용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생산증설이 절실했으나 부지를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어, 공장부지가 1만㎡ 이상이 돼야만 확장을 허용하는 면적규제에 막힌 것입니다.

- 이제 B사는 공장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입지한 소규모공장이라면, 계획관리지역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더라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별도의 이중규제에 묶여있던 공장들의 적극적 시설투자가 가능해지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남양주시 등 공장 4개소에서 37억원 투자 및 35명 고용 창출

### 개선 전

-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부지면적 하한(공장부지 면적이 1만㎡ 이상 등)을 넘어야 공장 증개축 가능

### 개선 후

-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부지면적 하한(1만㎡ 이상 등)을 폐지하여 증·개축 허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11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024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제한 완화

## 아파트 옵션 품목, 고르는 재미가 다양해졌다!

“왜 아파트 플러스옵션은 거기서 거기일까?” 내 집 마련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둘러보던 H씨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얼리어답터인 H씨는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아파트 옵션 품목에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선택품목을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된 규제로 인해 H씨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H씨의 마음에 꼭 맞는 플러스옵션을 갖춘 아파트가 분양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기존엔 추가선택품목이 4가지로 한정됐지만, 아파트 옵션 항목 추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플러스옵션’으로 불리는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돼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기술 진보와 주거생활 변화에 맞게 규제도 변화하며, 입주자들은 더 큰 선택의 폭을 누리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 및 입주자의 선택의 폭 확대에 기여

#### 개선 전

- 「입주자모집공고시」 추가선택품목을 발코니 확장 등 4가지로 한정

#### 개선 후

- 기술진보·주거생활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추가(예 : 사물인터넷)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4.10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025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규제 완화

## 같은 땅, 달라진 법?! 용도지역 바뀌어도 공장증축 가능해요!

“사업이 커지면 생산라인을 늘리는 게 당연지사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다 공장을 세웠겠습니까?” 90년대에 공장을 준 농림지역 안에 세웠던 C씨는 근래 사업이 잘 돼 공장을 추가로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돼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종전 준농림지역이던 당시엔 땅 면적의 40%(건폐율)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땅을 샀는데, 법규가 바뀌며 20%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C씨와 같은 사정의 공장들이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게 허용된 것입니다. 규제로 인해 제한을 받던 기존 공장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15년 10월말 기준 36개 공장 965억 투자,  
682명 고용 창출

#### 개선 전

- 준농림지역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입지규제가 강화되어 기존 공장의 증축이 곤란

#### 개선 후

-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기존 공장에 대해 '16년까지 기존 부지내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20%→40%로 완화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4.10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026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해양시설은 자체 폐수처리 허용

## 기업 안에서 폐수 정화하니 불필요한 비용, 깨끗이 사라졌다!

☞ A정유사는 해양시설로 신고 된 기름저장시설에서 기름을 처리하고, 남은 폐수를 규정된 폐수 배출시설에서 처리한 후 해양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A사는 기름 처리기준에 따라 배출수의 유분 성분을 100만분의 15 이하로 맞추고, 공공수역 배출기준 역시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은 유창청소업자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A사는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 규제개선을 통해 기름 처리시설을 갖춘 해양시설에서는 따로 위탁처리 하지 않고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외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불필요한 위탁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자체 처리시설 880억원 설비투자 확대 및  
위탁처리비용 연간 66억원 절감



### 개선 전

-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은 유창청소업자 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처리



### 개선 후

- 기업이 자체적으로 폐수 배출시설 등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자체 폐수 처리 허용

▶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4.9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해양수산부

# 027

수목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 벌채 연령은 Down! 국산 목재 활용은 Up!

“나무가 자랄 때까지 계속 투자하는 하는데, 중간 소득이 없으니 이 일을 그만둬야하나 싶네요...”  
임업인 P씨는 산림경영을 포기할지 고민 중입니다. 나무를 벌채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기준벌기령 탓에 벌채는 못 하고 계속 투자만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기준인 ‘벌기령’이 49년 만에 완화됐습니다. 1965년 일곱차례에 걸쳐 강화되지만 한 벌기령은 국산 목재 활용을 위촉시키는 근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녹화가 필요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금껏 국내 산림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벌기령을 낮춰서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업 활성화가 가능해졌습니다.



### 현장체감



산림자원 활용 증대로 약 200억원 임업 소득 증대

### 개선 전

• 기준벌기령 : (공·사유림)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잣나무 60년 등, (국유림) 소나무 70년, 낙엽송 60년, 잣나무 70년 등

### 개선 후

• 기준벌기령 : (공·사유림)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등, (국유림) 소나무 60년, 낙엽송 50년, 잣나무 60년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9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 028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 공장 넓히는데 부담이 확~ 줄었어요!

☞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을 넓힐 땅이 없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에 자리한 한기업 대표의 고충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G기업 등 6개 석유화학 회사는 공장 인근에 있는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공장을 넓히려 했었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 녹지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서 오른 땅값 상승분의 50%와 없애지는 녹지를 대체할 녹지의 조성비용을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이 내야 할 땅값 상승분 50% 내에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만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장 증축과 같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현장체감



여수시-석유회사 6개사 간 2조 6550억원 투자 MOU 체결

#### 개선 전

-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

#### 개선 후

-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14.8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 MOTIE

# 029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 임대료 부담은 줄고, 외국인 투자는 늘고!

지방의 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제조업체 T사는 외국인투자 비율이 30%인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T사는 외국인투자금액 35억원을 활용하여 6,000㎡ 용지에 1,400㎡ 규모 공장을 갖췄지만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부지가액의 2배 이상 투자'와 '최소 공장건축면적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외국인 투자액과 공장건축면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연간 약 1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혜택 기준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덕분에 A기업은 임대료 지출이 대폭 줄어 연간 약 2,100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게 되었고 여유자금으로 추가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A기업 등 4개 외투기업 부담경감 15억원,  
투자액 175억원 및 일자리 창출 182명

### 개선 전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토록 의무화

### 개선 후

-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를 임대면적 부지가액의 1배 범위로 완화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14.8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3)



# 030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자격 기준 완화

## 제조·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항만배후단지

☞ 풍력타워 제조업체 C사는 저렴한 임대료와 원자재·제품 출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길 원하지만, 물류기업에 유리한 입주자 선정기준의 벽에 가로막혀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만배후단지는 수출입 물류기업 위주로 입주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제조기업들도 항만이나 인접 부지를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제조업에 유리하도록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제조기업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와 물류비 부담 줄어들면서 시설투자과 고용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3개 제조업체 223억원 신규 투자유치 및 281명 고용창출

#### ☹ 개선 전

-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 기준이 물류업을 우대하고 있어 제조기업 입주 실적이 미흡
-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의 기업으로 제조업 입주 자격 제한

#### 😊 개선 후

-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의 경우 40%이어도 제조업 입주 가능

▶ 「1종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14.7월)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해양수산부

# 03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공업지역 개발 가능

## 그린벨트 풀린 곳에서 상공업이 살아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 동네가 많이 발전할 거라 기대했는데, 상가도 없고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H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자연녹지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층 이하 단독주택 위주의 개발만 가능함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된 것입니다.

이제 H군엔 판매시설이나 각종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개선 이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덕분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민간 참여비율은 1/2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도 35%이상 공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 될 경우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토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재심의 없이 국토부와의 협의만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른 사업의 발주·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장체감



7개 지구(총 사업비 3.1조) 착공으로 1년 간 6,200억원 투자, 5,100명 일자리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



### 개선 후

- 민간 출자비율 완화(1/2-2/3), 상업시설로 용도지역 변경 허용, 임대주택 용지 미매각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 허용, 개발계획 변경 간소화 등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14.6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 032

주택의 규모제한 및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폐지

## 소형주택 의무비율 사라지니 주택시장 자율성 UP!

“이 동네엔 소형주택이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서 있어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지키다보면 미분양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A건설사 관계자의 우려입니다. A사는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된 지역에, 3~4인 가족을 겨냥한 85㎡ 아파트를 짓고 싶었으나 규제에 부딪혔습니다. 전체 호수의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건설비율 제한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기존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은 20% 이상을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A사의 사례처럼 지역별 주택수요에 맞춘 적정 규모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했으며, 원활한 주택분양으로 주택시장 활력이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 주택 공급 및 사업주체의 사업성 증가

### 개선 전

-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

### 개선 후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규정을 삭제
-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14.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14.12월)

# 033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

##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주유소가 진화한다!

☞ A주유소는 주위에 주유소가 늘어나고 유가가 하락하여 더 이상 주유 수익만으로는 경영이 힘든 형편입니다. 주유소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려 했으나 부대시설은 1층에만 입점이 가능하고 그나마 면적이 500㎡로 제한되어 있어 더 이상 편의시설을 늘리기 어려웠습니다.

☑️ 주유소 위치구조 및 설비 제한이 완화되면서 A주유소는 부대시설을 두 배 이상 확장하고 2층과 3층에도 편의시설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확장되면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종업원을 늘리는 등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주유고객 서비스도 개선되면서 어려웠던 주유소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 현장체감



면적 및 층 제한 완화에 따라 112개 주유소 302억원 투자

#### ☹️ 개선 전

- 주유취급소의 고객부대시설(휴게음식점, 전시장 등) 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에서만 가능

#### ☺️ 개선 후

- 주유취급소의 고객용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1,000㎡로 확대 및 모든 층으로 확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02-2100-0866)



# 034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 병마개 표시 의무 없어지니 매년 40억 원 절감!

“굳이 필요도 없는 증명표시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S씨의 불만입니다. 이 업체는 먹는 샘물을 생산할 때 관리법에 따라 병마개 부분에 먹는샘물 ‘증명표시’를 인쇄하느라 과도한 인쇄비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증명표시로 관한 인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증명표시’ 부착의무가 폐지된 것입니다. 먹는샘물 병마개에 인쇄하는 ‘증명표시’는 판매량을 파악해 제조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지만, 부담금 부과 기준이 판매량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바뀌며 효용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덕에 기업 당 매년 지출되던 인쇄비용 6,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 현장체감



먹는샘물 제조업체 전체 42억 38백만원 (업체당 6천 5백만원)의 인쇄비용 절감

### 개선 전

-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부담금 증명표시를 위해 용기에 증명표시를 인쇄해야 함

### 개선 후

- 먹는샘물 등의 용기에 증명표시 인쇄의무 폐지

▶ 「먹는물 관리법」 개정(‘14.1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mev 환경부

# 035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 ‘불법’ 오명 벗고 당당하게 글로벌 손님 맞이해요!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일년에 두 번씩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고나면 남는 돈이 있나요...” 명동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외국인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영업하는 W사 대표의 말입니다. 서울시내 호텔의 관광객 수용이 한계에 이르며 게스트하우스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추세에도, 서울시내 대다수 게스트하우스가 ‘호스텔업’의 도로인접조건(대지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인접할 것)에 부합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는 특성상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인접조건을 갖추려면 제한요건이 많기에, 벌금과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영업 손실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접도로 폭을 ‘8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이뤘습니다. 합법화에 따른 적극적 시설투자를 통해 더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고급 시설로 탈바꿈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 현장대기



외국 관광객 주요 밀집지역의 호스텔업 활성화

#### 개선 전

- 인접도로의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주거지역에 호스텔업 입지 허용

#### 개선 후

- 일반거주 지역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등)은 인접도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6.3월)

# 036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 도로변에 고립된 자투리 그린벨트, 활용할 길 열린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지 않나요? 교회 증축을 추진하려다 해당지역 진출입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난관에 봉착한 K목사의 의문입니다. 단절토지란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토지를 말합니다. 문제가 된 땅은 도로가 들어서며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주변은 모두 일반지역이었습니다. K목사는 이러한 단절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1만㎡밖에 안 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건의했습니다.

최근 K목사는 규제개선 신문고에 올린 건의가 수용됐단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우려가 적은 단절토지의 경우 1만㎡ 미만에서 3만㎡까지 해제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입니다. K목사 뿐 아니라 인근 거주민들도 재산권 확보의 기대감으로 웃음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로서 그린벨트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전국 곳곳 자투리땅을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 현장대기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한 자투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개선 전

•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 면적을 1만㎡ 미만으로 규정

#### 개선 후

•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허용 면적이 1만㎡를 일부 초과 (상한 3만㎡)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6.3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037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더 넓은 공간 활용해요

“제가 지으려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 1,200㎡만 걸쳐 있는데요?” 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렁이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던 A씨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있는 시설부지가 총15,000㎡를 초과했기에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시청 직원의 답변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진흥지역 밖에 있는 부지까지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제한을 적용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A씨는 계획대로 사육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A씨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한 결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시설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친 경우, 총면적이 농업진흥지역 허용면적 이상이면 시설 설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면적에만 제한이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 현장대기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증설이 가능해져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개선 전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허용 시설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걸치는 부지의 총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 설치 제한

### 개선 후

- 농촌진흥지역 경계에 걸치는 시설부지의 총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라도 농업진흥지역 내의 면적이 1,500㎡ 이내면 허용

▶ 「농지법 시행령」 개정('16.1월)

# 038

토지 인허가절차 신속처리 도입

## 쉽고 빠르게, 응답하라 토지인허가!

“허가서류 작성부터 신청, 착공까지 규제가 각 부처로 분산돼있고 허가가 날지 여부도 알 수 없으니 속 터지네요.”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던 K씨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포기했습니다. 창업을 꿈꾸던 S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칠 때마다 추가 조건이 제시되며 해결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 토지인허가간소화법으로 K씨와 S씨의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우선, K씨는 상담자문제도를 통해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전원주택 건축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S씨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번의 조건만 부과 받고 심의기간도 짧아져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개선 덕에 불편이 해소되고 개인과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 현장대기



주택, 축사, 공장 건축 등 소규모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 소요 기간 단축(1~7개월), 개인·중소업체의 투자 촉진

#### 개선 전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공장설립승인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원회 심의 필요

#### 개선 후

- 관계기관 협의를 순차적 협의에서 일괄 협의로 전환, 인허가 조건 충족 전 사전심의제도 도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 제정('16.1월)

# 039

300억 이상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 종합심사낙찰제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제값 받는다!

“양심껏 좋은 품질의 시공을 하고 싶어도 일감을 따내려면 가격경쟁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죠...” 건설업체 직원 C씨의 말입니다.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품질저하 및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발생하던 문제들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연 12~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뀔에 따라, 공사품질 및 재정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 🎯 현장대기



고품질의 계약목적물 조달, 적정원가 지급 등 산업 경쟁력 제고

### ☹️ 개선 전

-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시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및 유지관리비로 인해 오히려 예산낭비 초래

### 😊 개선 후

-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기술력을 같이 심사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면전환, 덤핑입찰 등에 의한 품질저하 방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5.12월)

# 040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 기존 땅, 편입한 땅 구분 없이 특례적용 한 방에!

“2016년부터 의무적용되는 HACCP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공장 증축이 시급한데, 건폐율에 막혀 공장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한단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A사는 기뻐했습니다. 기존부지에 공장을 증축하고 부족한 건폐율은 인접토지를 조금 매입해 해결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가 기존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에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에선 공장증축이 불가능하던 걸 알곤 절망했습니다.

- 현재 A사는 시설확충으로 HACCP 인증을 획득해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증축 시 필지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취급해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사 대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15억 원의 직접투자를 하고, 30억 원의 매출 증가와 20~30명의 신규 채용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대기



A 기업의 경우 약 15억원을 투자해 공장 증축 및 20~30명을 신규채용 예정, 연 30억원의 매출 증대

#### 개선 전

-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축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별개로 보아 각각 건폐율 40%이 적용, 연계건축 불가

#### 개선 후

-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합병을 전제로 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시적(~'16년 말)으로 건폐율 특례(건폐율 40%) 적용, 연계 건축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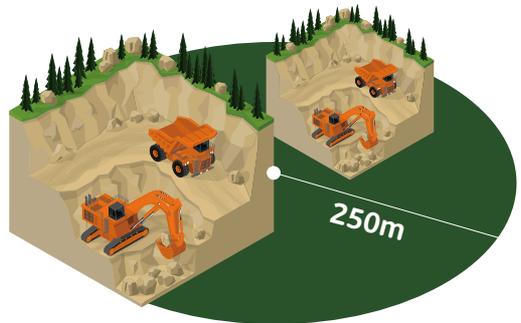
# 041

인접 산림지역 개발제한 폐지

## 산림 훼손 막고, 활용할 땅 넓어지고!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선 공장을 집약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 답답합니다. 괜히 여기저기 공장을 분산해 설치하면 산지만 더 훼손되지 않겠어요?” 서울근교 산지에 공장을 지으려다 좌절한 P씨의 말입니다. 최근 P씨는 본인이 공장을 지으려던 땅 근처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공장설립허가를 받는 바람에 연접개발 제한에 막혔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에 따르면, 반경 250m 이내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산지 이용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허가받은 면적과 P씨가 새로 신청하는 면적을 합해 3만㎡가 초과되면 P씨의 산지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 과거엔 P씨처럼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접개발 제한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산지의 집약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산지전용이 소규모로 분산돼 산지훼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풀어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며, 전국 산지면적의 8.3%인 53억㎡가 추가로 이용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 🎯 현장대기



화성시(20.6%), 연천군(0.4%), 수원시(20.3%) 등 인접개발 제한 면적 53억㎡에서 추가 전용 가능

### ☹️ 개선 전

- 산지전용허가시 신청지 250m이내의 기허가지와 합산하여 3만㎡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

### 😊 개선 후

- 산지전용허가시 기허가 받은 면적과 합산(3만㎡ 미만) 규정 폐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월)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042

개발제한구역 버스차고지 내 자동차 종합정비시설 허용

## 차고지에서 정비한 버스로 “안전 운행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고지를 둔 운송사업조합 대표 Y씨는 버스 정비·점검 시마다 외부 정비소를 방문하기가 번거로워 차고지에 자동차종합정비시설을 설치하려고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자동차 종합정비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Y씨는 국민신문고에 불편을 호소하였고, 국토부에서는 민원을 수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버스차고지에도 자동차종합정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Y씨는 버스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대기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33개소의 정비시설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정비 부담완화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의 버스차고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사무실, 정류소, 차고설비 등에 한정

#### 개선 후

• 버스차고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자동차 정비시설 추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9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043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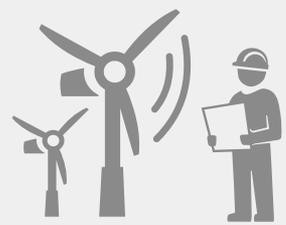
## 친환경 풍력에너지, 그린벨트에서도 뽐뽐 불어라~

“이렇게 바람이 뽐뽐 부는 곳에서 풍력을 활용하지 못하니 얼마나 아까워요. 환경 살리기 위한 풍력발전인데 환경규제에 막혔습니다.” D기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D기업은 풍황 자원이 풍부한 대구주변 산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 했지만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에너지설비와 연료재생설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데, 풍력발전설비는 설치가 제한된 까닭입니다.

- 이제 D기업은 계획의 차질 없이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풍력발전설비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허용된 덕분입니다. 풍력개발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규제개선인 셈입니다.



### 현장대기



풍력발전 개발·이용의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만 허용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에 풍력발전사업 추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8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044

공원점용허가 규제 완화

## 미리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 건축물로 인정!

☞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짓고 있었는데, 공사 기간 중에 해당 지역이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을 등재하였습니다. 이후 타 지역에 살던 A씨의 자녀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려 했지만, 주택 설치 시점이 공원부지로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증축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규제개선을 통해 공원부지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공원 결정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라도 기존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여 자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현장대기



공원 결정 전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 해소

#### ☹️ 개선 전

• 공원 결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만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허용

#### 😊 개선 후

• 공원 결정 이전에 허가 받고 공원 결정 이후 설치된 건축물도  
기존 건축물로 인정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허용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15.8월)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3)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045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계획관리지역서 생산 OK!

“중국시장이 열려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겼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공장을 못 지어 답답합니다” A사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천연소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공장 신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입니다.

☑️ 요즘 A기업 직원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공장신축이 가능해져서 28억원의 투자와 3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50여억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기농 화장품, 천연 염색물 제조공장, 제품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공장 등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덕분입니다. 기업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 여부에 따른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 🎯 현장대기



아산시 소재 입욕제 등을 생산하는 A기업은 30억원을 투입해 공장 신축 및 30여명 신규 고용 예정

### ☹️ 개선 전

-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건축 금지

### 😊 개선 후

-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제품의 성분을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시설은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7월)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046

민간투자 사업범위 확대 및 여건 개선

## 정부-민간 손잡고 더 빠르게 국가 인프라를 만들어가요!

“풍부한 여유자금으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지만 SOC 투자는 꺼리게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니 사업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대형건설사 민자사업 담당자 K씨의 말입니다. 이처럼 과거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내에선 민간투자가 들어오지 않아 도로, 철도, 환경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있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민간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사업방식이 도입됩니다. 사업당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원도 강화돼 과거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국가기간망 연결이나 노심 혼잡구간의 지하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시에 민관협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투자촉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현장대기



BTO 사업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 · 추진 공시화

#### 개선 전

- 기존 BTO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사업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추진 곤란

#### 개선 후

-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BTO-rs, BTO-a방식 도입, BTL 민간제한 허용 및 공공청사 민자사업 가능, 사업자 영세를 일몰연장('15→'18년), 보증한도 확대(3천억→4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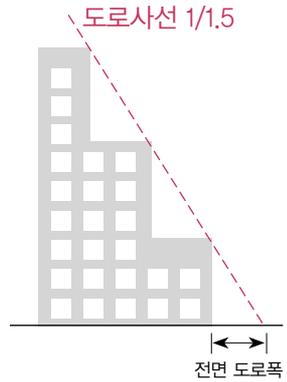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15.5월)

#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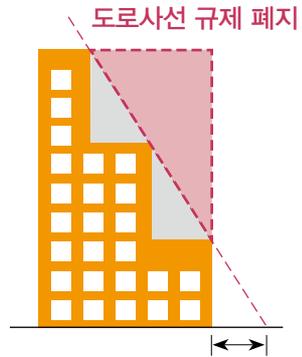
## 도로 사선 제한 폐지

### 획일적인 기준 바꾸니, 창의적인 빌딩 솟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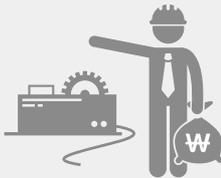
“여기 건물들은 왜 이렇게 죄다 이상하게 생겼지?” J씨 시민 M씨는 도로변을 걷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편 이 곳, 대지 양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한 K씨는 2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양쪽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아, 도로사선제한으로 인해 용적률(건축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전체를 활용할 수 없어서 사업성에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 도로에 접한 건축물들이 동일하게 사선으로 깎이는 이상한 경관이 생겨난 까닭은 건물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미관과 경제성을 제한하는 규제 탓에 사후 불법 증축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집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용적률을 개발해 투자가 활성화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 현장대기



용적률 10% 추가개발이 가능하여 연간 1조원 투자유발 효과

#### 개선 전

-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너비의 1.5배로 획일적으로 제한해 미관 저해, 경제성 저하, 준공 후 불법 증축을 조장

#### 개선 후

- 획일적 도로 사선제한 폐지로 용적률 추가 개발이 가능, 거리 미관 향상

▶ 「건축법」 개정(‘15.5월)

# 048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 중복된 환경평가 생략해 투자 이끈다

☞ 외국계 기업 R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설립될 공장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지만, 이미 산업시설용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문의 결과, 사업인허가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납품일정과 자금사정을 고려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R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 ☑ 다행히 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설립되는 공장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장설립에 필요한 소요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현장대기



12개월 단축



약 1.6억원 절감

공장 설립 협의의 소요기간 12개월 단축, 작성대행비용 약 1.6억원 절감

#### ☹️ 개선 전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제자유구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 영향평가 실시

#### 😊 개선 후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장 설립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15.3월)

# 049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입지 규제완화

## ‘연료전지’ 40년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결실 맺다!

☞ C사는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 부지 옆에 공장증설을 위해 1만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76년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40년 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희망을 가졌으나, 국토부가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다른 의견을 내놓아 다시금 난관에 빠졌습니다.

☑ 양측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C사의 연료전지 설비 사업 계획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 되었습니다.



### 🎯 현장대기



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약 3,000억원 투자 기반 조성

####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허용되는지 법령해석상 이견

####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뿐만 아니라 신규지정 도시계획시설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허용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3월)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 050

원폐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

## 공장 폐수, '먹는 물'만큼 깨끗하면 안심이죠?

☞ D씨는 경기도에 도금공장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D씨가 계획하는 도금공장은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미량 검출된 시설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제지역에는 입지가 불가능했습니다. D씨는 원폐수에 함유되는 구리의 검출농도가 먹는 물의 기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적용기준이 마련되었고, 적용기준 이내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에서도 배출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입지가 가능합니다.



### 🎯 현장대기



설치 비용 약 225억원 기업부담 완화

#### ☹️ 개선 전

• 배출시설 제한지역의 원폐수에서 특정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입지 제한

#### 😊 개선 후

• 원폐수에서 특정물질이 '먹는물 수준'으로 배출·관리되는 경우는 입지 가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11월)

☎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1)

 환경부

# 051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

## 그린벨트서 열리는 실버복지... “요양시설 찾느라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가까운 시설에 계셔야 자주 찾아 볼 텐데 마땅한 곳이 없어 속상합니다.” S씨 부부는 몸이 편찮은 어머니를 맡길 요양시설을 알아보다가 낙담했습니다. 바쁜 생계로 어머니를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틈틈이 찾아뵙자고 결심했는데, S씨의 지역엔 노인복지시설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거리에 있는 시설까지 찾아갈 시간을 자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에, S씨는 벌써부터 속상합니다.

이제 S씨의 지역처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큰 곳에선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엔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즉, 시·군·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선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맞춰 규제도 변했습니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제한 없이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장대기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

#### 개선 전

- 노인요양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분포면적과 관계 없이 국가·자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허용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4.11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052

입주업종 제한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풀고, 지역경제 살리고”

여수시 국가산단 연관단지 공장부지내 외국인기업이 100억엔(한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화학제품 제조공장을 건립하고자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제안 부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상 석유화학업종 입지 제한으로 공장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인기업은 국내 투자계획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환경보존방안 수립 및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업체의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승인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공장설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 여수시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준공 전 조성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투자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현장대기



외투기업 A업체는 여수시에 총 1,000억원 규모 투자 확정, 총 3,060명 의 직·간접 고용창출 예상

#### 개선 전

- 여수시 증흥연관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상 '화학물 및 화학업종'에 대해 입지 제한

#### 개선 후

- 여수시가 지역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 국토부의 산단개발계획 변경 승인 받음
- ▶ 화학물 및 화학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14.10월), 실시계획변경 승인('15.2월)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061-659-4582)



# 05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진입도로 폭 기준 완화

## 진입도로 폭 2m 줄이니 지구단위계획이 대폭 쉬워졌다!

“주택, 식당이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여건 상 10m로 도로를 넓히려면 수 억 원은 들여야 합니다. 진입도로 폭 기준을 줄여줄 순 없나요?” 대규모공장 설립을 계획한 O사의 요청입니다. O사는 공장설립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했으나 폭 10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가 부딪혔습니다. 현재 8m의 도로를 확장하려면 주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소유주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 이제 O사는 별도의 도로확장 없이 공장설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진입도로 폭 기준이 '10m이상'에서 '8m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규제개선 덕분에 비용부담도 덜고 계획 수립기간도 대폭 단축한 O사는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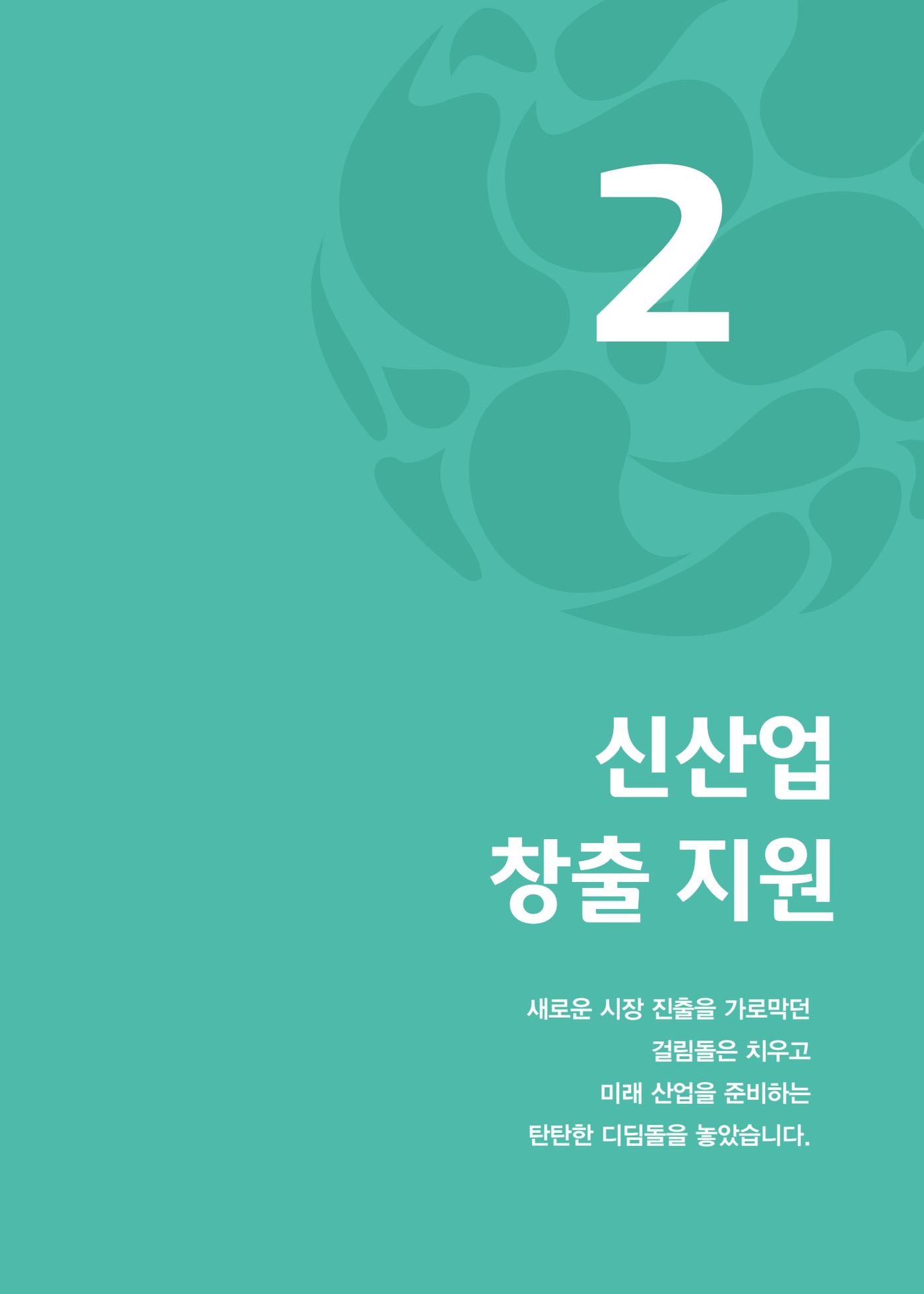
기존 도로의 확장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확대  
진입도로를 신설·확장하는 경우에도 토지매입 비용 등 절감

### 개선 전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폭 10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의무

### 개선 후

-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완화
-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14.7월)



# 2

## 신산업 창출 지원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걸림돌은 치우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탄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 054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 간소화

수출신고로 낭비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수출합니다!

“온라인 쇼핑 특성상 신속배송이 생명인데, 해외배송 전에 일일이 수출신고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T사의 고충입니다. T사는 그간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없이 해외배송을 한 탓에, 반품이 이뤄질 때마다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자가통관(직접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려운 무역용어가 많고 항목이 많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 ☑ 최근 T사는 고객이 제품을 반품해도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돼 영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정보를 전산연계를 통해 일괄 전송받는 방식으로 유니패스가 개선되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간편하고 일괄적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치열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로 연간 157억원  
신고비용 절감

## ☹ 개선 전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물품 건별로 37개 수출신고 항목을 작성하여 건건이 신고

## ☺ 개선 후

-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일괄 전송받아 자동으로 수출신고 처리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15.9월)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관세청

# 055

해양심층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

## 블루오션 해양심층수 시장 “빚장 푼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건강에 좋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체 C사도 해양심층수와 처리수를 식품에 활용하기 위해 식약처에 문의하였으나, 식약처는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C사는 신제품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식품이용범위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식약처와 협업과제로 채택하여 '해양심층수 처리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머지않아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를 활용한 건강한 해양심층수 음식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 체감



A사 해양심층수 정제시설 증축(5억),  
B사 40여건 투자 유치(30억원 규모)

### 개선 전

•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를 두부류, 절임류 등 6개 식품에만 사용

### 개선 후

•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를 모든 식품에 사용 허용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15.8월)
- ▶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 기준」 개정('15.8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9)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043-719-2417)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056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구분 명확화

## 내 건강 행기는 웰니스 제품, 더 빠르게 국민 곁으로!

“간단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인데, 왜 의료기기판매 신고 절차를 다 거쳐야 하나요?”  
L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편리하게 혈압과 혈당을 잴 수 있는 건강관리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출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탓입니다.

이제 L씨의 회사는 절차 걱정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자가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니라 웰니스 제품이란 판단기준이 명확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웰니스 제품 개발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웰니스 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제품에 개발 및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1~4년 → 2개월) 및 비용 절감(1.5~4억원  
→ 1천만원)

### 개선 전

- 의료기기와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 제품의 판단 기준이 없음

### 개선 후

- 개인용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에서 분리 지정
-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마련 ('15.7월)

# 057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

## 온라인 쇼핑에 한류 바람이 분다! 해외에서도 결제 OK!

“알리페이사와 계약하려니 언어 장벽부터가 만만치 않고 조건도 까다롭네요. 사업 아이템을 접어야 할까요?” Y씨는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 소비자에게 특화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결제를 하려면 해외 결제업체와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중국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사와 직접 계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해야 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소규모 창업자로서는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 ✓ 최근 Y씨가 개설한 쇼핑몰은 승승장구 중입니다. 국내 PG사(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구매자가 국내물품을 '역직구'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국내 PG사가 외국환업무를 금지하던 규제가 풀리며, 국내 가맹점들이 해외 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국내 PG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16개사 신규등록 (15년 하반기)



### 개선 전

- 증권사의 외화대출 등 신용공여 금지,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 업무 금지



### 개선 후

-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상품구매 등과 관련된 외국환 정산업무 허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5.6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058

산업융합제품 등 신기술제품 공공판로 지원

## 나라장터에 부는 신(新)바람~ 융합신제품으로 공공판로 쉽게 진출!

☞ 융합 신제품을 개발한 P씨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P씨의 제품은 융합제품이라 인증기준이 따로 없거나 인증 획득을 위해 장기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실상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기술융합 제품에 대하여 인증 외에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품질을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융합신제품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쉬워집니다.



### 🔧 현장체감



인증 없이 시험성적서 등으로 신청한  
24건 중 최종 3건이 지정되어  
약 4,800만원의 인증비용 절감

### ☹️ 개선 전

• 인증이 없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신청 불가

### 😊 개선 후

• 인증기준이 없는 융합신제품은 시험성적서만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능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15.6월)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70-4056-7283)

📌 조달청

# 059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 전통주, 인터넷판매 “산지에서 안방까지!”

“문배주 5대째 전수자인 문배주양조원은 전통주의 산업화를 위해 양조시설을 현대화하고 투명한 유리병 용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용량 및 도수도 다양화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가 부족하고 판매망이 취약하여 수요와 소비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취약한 판매망을 보완할 방법이 아쉬워요.”

전통주의 인터넷 통신판매를 허용하여 전통주 인터넷 판매·구매 경로가 한층 확대되고 편리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전문 인터넷전문 쇼핑몰인 '농협a마켓'에 '우리술 판매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곳에 문배주양조원도 입점하여 '문배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농협A마켓'에 문배주 양조원 등 10개 업체 86개 품목입점  
'16.1월 전통주 제조자 교육 후 3월부터 조달청 입점 예정

### 개선 전

•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현행)제조자, 우체국, aT쇼핑몰, 지자체 홈페이지 한정

### 개선 후

•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에 농협쇼핑몰, 제조자협회 홈페이지,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 추가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15.5월)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82)

NTS 국세청

## 060

식용 양식해마 식품원료 사용

수출 효자로  
등극한 ‘해마 식품’

해마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해마양식이 성공하여 대량공급이 가능해졌고, 식약처는 해마의 국내외 섭취 근거, 안전성 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양식에 성공한 ‘빅벨리해마’를 식품원료로 허용하였습니다.

- 해마가 식품원료로 허용되자 제주 면세점에서 해마 엑기스를 판매하여 한 해동안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해마는 일본, 홍콩 등에서 인기가 좋아서 100kg 이상을 수출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제주 면세점의 경우 해마 엑기스 판매로 1.5억원('15년) 매출 증대

## 개선 전

- 식용양식해마는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

## 개선 후

- 식용 양식해마를 해마 엑기스, 건조해마 등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5.2월)

# 061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규제 완화

## 버스 뒷면에 광고 신고 기업도 지자체도 활력 썩싱~!

“규정상 버스 측면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정차중일 때 노출되는 버스 후면에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버스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 대표의 아쉬움입니다. 특히 경기불황으로 광고주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2014년 말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버스 후면 광고가 허용되면서 효과적인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운영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던 지자체 입장에서 추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전금(연간 약 25억원)을 절감하면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상생 효과를 낳았습니다.



### 현장체감



차량 후면 광고 개방으로 서울시 60억 (7,485대) 추가 광고시장 확대

### 개선 전

- 교통수단의 이용광고물은 차체의 옆면 2분의 1 이내로 표시가능

### 개선 후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광고를 차체 옆면 뿐만 아니라 후면의 2분의 1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광고면적 확대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14.12월)

## 062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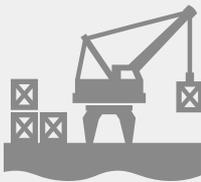
## 신고 절차 생략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 UP!

“항공화물 환적은 신속함이 생명인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매번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A사의 호소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에 입항하는 환적화물의 97%가 인천공항을 통해 환적됩니다. 그런데,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등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적절한 시간 내 환적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공항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커집니다.
  - 국내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환적 하는 화물의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적으면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 화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14년 신규 환적화물량 1,716톤 및 부가가치 약 95억원 창출



### 개선 전

- 김포공항 도착 환적화물은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해야만 인천공항으로 이동 가능



### 개선 후

-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입항시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면 반출입 신고와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

▶ 「환적화물 특례 고시」 개정('14.8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관세청

# 063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로 경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환경 살리는 풍력발전, 한국에선 수년째 챗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풍력협회 관계자 J씨의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풍력발전은 그동안 입지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크게 발전하지 못해왔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에 설치할 진입로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없어 까다로운 산림관리기반시설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가면적을 3만㎡에서 10만㎡ 이하로 완화하고, 진입로 기준도 풍력시설만의 특성을 감안해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해 앞으로 국내 풍력발전 업계의 기술축적과 해외진출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E풍력 18.75MW(25기) 규모 공사착공 ('15.5월)으로 투자액 675억원, 고용효과 150명



### 개선 전

•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을 3만㎡ 미만으로 제한



### 개선 후

•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3만→10만㎡ 이하로 완화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8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064

카셰어링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카셰어링 활성화

규제개선으로  
공유차 시장 키운다!

☞ 카셰어링 서비스업체 대표 P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고객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역을 확장하고 싶은데, 현행법상 영업하려는 시·군마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차장도 2년 이상 계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셰어링은 IT기술을 활용해 무인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주차장 관리업체는 장기계약을 꺼려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 이제 P씨의 고민이 해소됐습니다. 무인 대여 시스템을 활용하는 카셰어링 업체가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면제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 2년에서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게 규제가 바뀌었고, 예약소 주차장을 1년 이상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서 중복확보 문제가 개선됐습니다.



**현장체감**


'15.12월 기준 카셰어링 규모는 전년 대비 회원수 6.3배(40만→250만명), 서비스존 2.6배(14백→36백개), 차량수 3.1배(20백대→65백대) 증가


**개선 전**

- 카셰어링 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는 2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 차고지와 주차장 중복 확보 등 의무 부담


**개선 후**

- 카셰어링업체에 대한 사무실 확보 의무 면제, 주차장 사용계약 기간 축소(2→1년), 차고지와 주차장 중복 확보 의무 완화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4.7월, 11월, '15.12월)

# 065

소방신제품 시장 출시 기회 확대

## 혁신적인 소방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으로!

소방용품 생산업체 A사는 소방신제품 설명회가 연 2회 뿐이라 이를 준비하다가 시기를 놓쳐 반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B사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소방신제품 설명회' 기회 확대로 자사의 신기술이 '도입추진'으로 평가 받아 시장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는 소방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신제품설명회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최근 '제11회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도입추진으로 평가된 '스프링클러신축배관'과 '유량계형 체크밸브'는 시장수요가 매년 신축배관 50만개, 체크밸브 1만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소방 신제품 기업 설명회를 통한 밸브, 스프링클러 등 2개 품목연간 41.8억원 매출 증대

#### 개선 전

- 소방 신기술 · 신제품의 설명회 · 평가를 반기별로 연 2회 개최

#### 개선 후

- 소방 신기술 · 신제품의 설명회 · 평가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

▶ 「소방신제품설명회 운영규정」 훈령 개정('14.7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2100-0879)



## 066

수출용 치아미백제에 대한 수입국 기준 적용

수출용 제품은  
외국 기준에 맞춰야죠!

“외국에서 판매할 제품인데 왜 국내 기준을 적용하나요?” 의약품 제조업체인 L사는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를 넘는 치아미백제를 개발해 수출 하려 했지만 규제에 막혔습니다.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국내 기준 때문입니다.

기존엔 수출용 제품에도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돼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를 넘으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에서 과산화수소 3% 초과 제품을 허용하는 경우 수입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서 치아미백제의 수출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 현장체감



과산화수소 3% 초과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으로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GMP 시설 투자비용 약 10억 원 절감



## 개선 전

-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치아미백제인 경우에도 국내 과산화수소 함유량 기준(과산화수소 3% 이하) 적용



## 개선 후

- 수출용 '치아미백제'에 대해 과산화수소를 3%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입국 사양에 따라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 가능

▶ 「의약품 범위 지정 규정」 개정('14.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3702)



식품의약품안전처

# 067

자동차 튜닝규제를 개선하여 튜닝산업 활성화

## 자동차 튜닝산업, 힘차게 달립니다!

“요즘 캠핑카나 푸드트럭에 관심 갖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의 캠핑카들처럼 조명 설치도 할 수 없고, 장사에 필요한 취사시설 설치도 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튜닝 전문업체 직원 P씨는 꼭 막힌 튜닝산업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제 캠핑카와 푸드트럭의 구조 변경이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안전검토만 거치면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냉동·연료 시설 설치로 증가된 차량무게의 허용치를 확대해서 생업활동과 여가활동에 딱 맞는 형태로 차량을 개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인증이 된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이라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도 튜닝을 할 수 있으니 취향따라 차량을 꾸미기가 편해졌을 뿐더러 튜닝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346억 투자 창출, 576명 고용 창출

#### 개선 전

• 엄격한 튜닝규제 탓에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개선 후

• 캠핑카(승합), 푸드트럭(화물)은 안전검토 등을 거쳐 구조변경 허용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14.6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068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

## 나의 건강, 이젠 스마트폰으로 챙겨요!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왜 의료기기판매 신고를 해야 하나요?” L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혈압과 혈당을 잴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출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제 L씨의 회사는 절차 걱정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또한, 운동과 레저 활동을 할 때 편리하게 심박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제품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운동과 레저를 위한 심박수계까지 의료기기로 규정했던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 현장체감



판매업신고 면제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비용 3억 36백만원 절감

#### ☹ 개선 전

- 스마트폰에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탑재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함
-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수였음

#### ☺ 개선 후

-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없이도 제품 출시 가능
- 모바일 의료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면제
  -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14.4월)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4.8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6 / 0404)



# 069

핀테크 기업 등 외화이체업 가능

## 은행 통하지 않고도 '터치' 한 번에 외화송금 가능!

“외국환은행이 아니면 국경간 지급·결제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지금의 규제로는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 송금서비스 창업을 준비하던 B씨는 규제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B씨는 은행의 고유한 업무였던 국경간 지급·수령 등 사무를 소액에 한해선 개인사업자도 직접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최근 B씨는 규제 걱정 없이 사업 아이템 개발에만 집중합니다.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만이 외화의 지급·수령을 영위할 수 있던 기존의 규제 하에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향후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에 발판이 놓이는 것은 물론 유학생 등의 소액이체 부담도 대폭 줄 것이 예상됩니다.



### 🎯 현장대기



핀테크 사업 활성화 및 개인간 송금시 이체수수료 부담 감소, 음성적 외환송금 양성화

### ☹️ 개선 전

•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국경 간 지급·결제 등을 수행할 수 없음

### 😊 개선 후

•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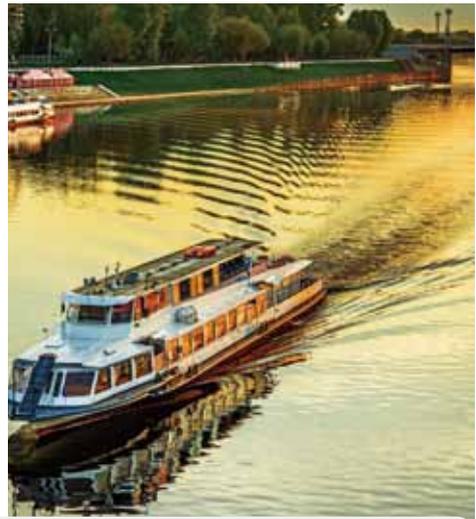
## 070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저수지 야경 보러  
뱃놀이 가잔다~♪

“저수지가 단순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밤에도 유선업을 허용해줄 순 없을까요?” 수성저수지에서 보트·오리배 등 유선 운항을 제공하는 S사 대표의 요청입니다. S는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인근 야경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밤에도 유선업을 하고자 했으나, 일몰 후엔 유선 운항을 금지하는 규제에 막혔습니다.

이제 S사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수성구·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 등 당사자 간 합의점 도출을 거쳐 규제개선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의 유·도선 운항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하되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엔 일몰 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다양한 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현장대기**


대구시 수성못에서 야간 유람선(2척) 운행 계획으로, 하루 이용객 200명 및 연간 10억원 이상 운행수익, 주변상권 활성화


**개선 전**

• 저수지에서의 유·도선 야간운행 금지


**개선 후**

• 안전대책을 확보할 경우 야간 유·도선 운행 허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지침」 개정('16.1월)

# 071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확대

## 농촌 마을이 달라진다, 6차산업으로 달려간다!

“가족과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 머물 곳도 마땅찮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고추장민속마을을 찾은 J씨는 식당과 숙박·편의 시설 부족에 실망했습니다. J씨가 방문한 고추장민속마을은 대를 이어 전통을 계승하는 전통장류 기능인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관광기능보다 산업적기능만 확장된 탓에 관광객이 장류 제조 업체만 잠시 둘러보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고추장민속마을에도 식당, 민박, 편의시설 입주가 허용되게끔 입지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단순 머물러다 가는 형태의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6차산업 지구 지정으로 농가소득은 커지고 관광객의 즐거움도 배로 늘고 있습니다.



### 🎯 현장대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9개소 지정, 지구내 업체매출 714억원 증가 예상

### ☹️ 개선 전

- 6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지역 내 각종 규제가 6차산업의 걸림돌로 작용

### 😊 개선 후

- 농업과 지역자원 활용으로 2·3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위한 법률 제정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5.6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86)

농림축산식품부

## 072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완화

## 신(新) 의료기술, 더 빠르게 국민 곁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맘으로 개발했는데,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1년이나 기다리라니 답답합니다.”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앙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간편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 이제 A씨의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법정 소요기간이 1년에서 280일로 단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빨라지고, 국민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대기



시장진입 3개월 단축으로 의료기기업체  
연간 150억원 매출 증대

### 개선 전

- 신의료기술평가 법정 소요기간을 1년 이내

### 개선 후

- 신의료기술평가 법정 소요기간을 280일 이내로 완화
-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15.5월)

# 073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 폭 규제 완화

## 6차산업 성공은 도로폭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3m 폭의 도로에서도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데 4m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네요.”  
 N씨는 1·2·3차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젖소를 사육(1차산업)하는 동시에 우유를 수제요구르트로 가공(2차산업)하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3차산업) 중인 것입니다. N씨는 늘어난 방문객 규모에  
 맞게 유가공품 가공공장을 신축하려 했으나 진입도로 규제에 부딪혔습니다.

- 이전엔 가공공장을 신·증축하려면 진입도로 폭이 4m 이상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A씨는 진입도로 폭 확장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6차산업 사업자의 경우 진입도로 폭이 4m 미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진입도로 폭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6차산업 경영인의 비용부담이 줄었습니다.



### 🎯 현장대기



6차 산업 추진중인 예비 인증사업자(379개)  
 중 진입도로 폭 4m미만 사업자 89개 경영  
 체에 평균 1억원의 비용절감 예상(89억원)

### ☹️ 개선 전

-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폭 4m 이상 확보 의무화

### 😊 개선 후

- 농·어·임업인이 설치하는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은 진입도로 폭 확보 의무 면제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15.5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3

##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실패의 부담을 떨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작은 기업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074

정보보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체계 구축

## 유사한 인증 또 따야하나? 상호인정으로 고민 덜었어요!

“비슷한 인증을 따기 위해 또다시 비용을 들이려니 너무 아깝습니다.” V사 대표의 말입니다. V사는 미래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 인증인 ISM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보 보호 대응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선 유사한 정보보호 인증제도인 PIMS 및 PIPL까지 취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부처마다 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지, V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사한 인증을 취득하느라 기업이 느끼던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미래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각각 방통위,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제도 간 상호인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정보보호 인증 간 상호인정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인증심사시 25%의 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상호인증 시행 후 22개 업체 혜택으로  
9,530만원의 수수료 절감

### 개선 전

- 행자부(PIPL) · 미래부(ISMS) · 방통위(PIMS) 유사 정보보호 인증 중복 운영

### 개선 후

- 부처별 유사 정보보호 인증 · 평가제도(행자부(PIPL) · 미래부(ISMS) · 방통위(PIMS)) 상호인증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15.12월)

## 075

특허 무상개방 활성화

## 잠자고 있는 특허, 중소기업을 통해 되살아나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허 중 잠자고 있는 특허가 많긴 하지만, 굳이 무상으로 개방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기업 B사 직원의 말입니다. 별다른 혜택이 없기에 특허 무상개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B사의 판단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M사는 특허를 구입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 B사 같은 대기업과 M사와 같은 중소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무상특허 개방이 대폭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특허를 개방할 경우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여되는 혜택이 생긴 것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무선네트워크 센서 특허를 이전받아 보안 시스템 개선에 적용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접착제 제조특허를 이전받아 2차전지 핵심 소재를 개발한 중소기업 등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사례가 규제개선 이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15년 73개 중소기업에 총 345건의 특허 무상 개방, 1억원 지식포인트 부여

#### 개선 전

- 특허권자의 특허 개방에 대한 특허료 지원 혜택 없음

#### 개선 후

- 특허권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특허를 개방한 경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 (무상 실시) 특허료 50% 감면
- (무상 양도)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부여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15.11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특허청

# 07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기간 완화

##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라!

☞ 국내 식품기업 C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력 제품 부문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인증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 안전 강화하고 해당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 일정을 단축하고 통보를 앞당기는 등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C사와 같은 식품 관련기업들이 부담 없이 인증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J기업(4가지 제품)은 인증기간 10일 단축으로 1억원 매출 증대

#### 개선 전

- 품질인증 처리기한 : 30일
- 품질인증 심사일정 통보 : 15일 이내
- 재심사 처리기한 : 30일 / 수수료 : 5만원

#### 개선 후

- 품질인증 처리기한 : 20일
  - 품질인증 심사일정 통보 : 7일 이내
  - 재심사 처리기한 : 20일 / 수수료 : 폐지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5.10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043-719-2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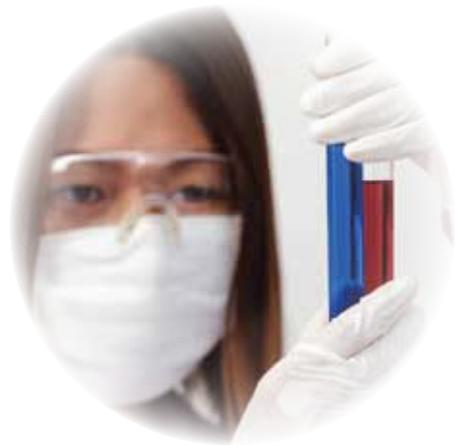
## 077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확대

## 화학전공자 아니라도 의약외품 제조해요!

의약외품인 탈지면을 제조하는 T사는 자사에 근무 중인 물리학과 대학 졸업자를 제조관리자로 신고하려 했으나, 약사법령에서 정한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규제에 막혀 신고가 어려웠습니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이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이공계대학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타 이공계대학 졸업자나 일정 기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비이공계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도 해당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해 T사와 같은 관련업체의 고용부담이 해소된 것은 물론 취업희망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 체감



이공계 대학 졸업자등 제조관리자 승인  
건수 9건 (이공계 8건, 비이공계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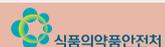
#### 개선 전

-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의사·약사 또는 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
- \* 마스크(보건용·수술용), 생리대, 탈지면, 붕대, 반창고, 안대, 거즈, 구강청결용 물류지 등

#### 개선 후

-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에 이공계대학 졸업자, 대학의 비이공계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추가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15.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02, 3703)



# 078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1인 창조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싹틔운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사과즙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인 창조기업 범위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신규 유망업종이 출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업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A씨는 사무공간과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 같은 업종의 입주기업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체감



15,700개 1인 기업에 지원사업 참가혜택 부여, 비즈니스 센터에 172건 입주신청

### 개선 전

- 1인 창조기업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을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

### 개선 후

- 1인 창조기업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8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3)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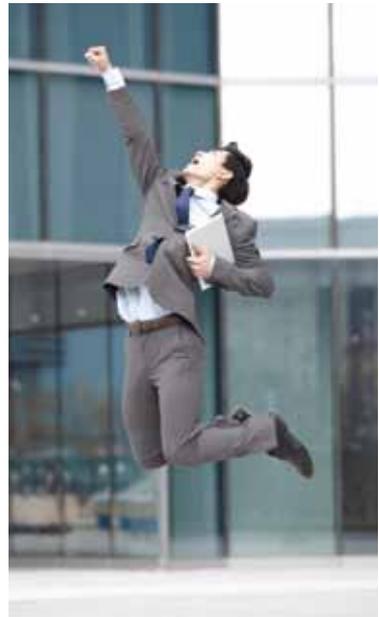
## 079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도입

실패 중소기업 재기,  
보다 쉽고 빠르게!

“한 번 위기에 빠져서 참 헤어 나오기가 힘들군요.”  
G중소기업 대표의 말입니다. G사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은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1년 가까이 되고, 2,000만원이 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단 말에 막막해졌습니다.

☑ 이제 G사는 보다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며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된 것입니다. 회생절차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실패중소기업이 빠르게 재기할 길을 열었습니다.



**현장체감**


5년 하반기 75업체 대상 12억원 비용절감  
및 기업당 160일 절감


**개선 전**

- 중소기업 회생안 가결요건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원의 2/3이상 동의를 요하고, 고비용의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


**개선 후**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원의 2/3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원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요건 완화,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업무 수행가능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15.7월)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2)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08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분류기준 완화

## 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검사부담이 확 줄었어요!

"창업 준비로 신경쓸 것도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식당 창업을 준비 중인 A의 불만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유료 설치검사를 받는 과정이 A씨에겐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급식소를 운영하는 B씨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감량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정상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실적보고를 하느라 10년간 430만원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1일 처리능력 200Kg 미만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 해야했던 행정절차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약 60여개소의 정기 및 설치 검사비용, 행정비용 등 6천만원 절감



### 개선 전

- 집단급식소 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매년 검사 필요



### 개선 후

- 폐기물 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매년 검사토록 한시적(~'16년말)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5.7월)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0)

환경부

# 081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활용한 창업환경 조성

## 마리나 서비스업 순풍 타고 요트가 대중에게 다가왔다!

▶ 낚시와 가족여행을 위해 6톤급 요트를 구매한 Y씨. 생각보다 요트를 사용하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1년에 20일 정도 이용하곤 방치하는 게 아까워 요트 대여사업을 알아보던 Y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트 대여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매표소, 승객대기장, 화장실 등을 갖추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상레저사업으로 등록되면 주류는 아예 반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을 개정하면서 요트 대여를 위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신설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 시설을 임대하고만 있어도 별도 사업장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주류반입도 가능합니다. 마리나업 신설에 힘입어 요트 대여업이 활성화되고 값싸게 요트를 즐기는 마리나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현장체감



38개 수상레저업체의 등록비용 142.5억원 절감하여 마리나산업 투자

#### ☹ 개선 전

- 1척 요트·보트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매표소, 화장실 등), 비상구조선 등을 구비하여야만 사업 가능

#### ☺ 개선 후

- 개인사업장 등이 없어도 마리나시설을 임대한 경우는 1척 요트·보트로도 대여업 등 사업 가능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15.7월)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5 / 044-200-5257)



## 소방 민원, 소방시설협회 한 곳에서 처리 끝!

☞ 소방시설업체 K사에는 시설업 관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경력관리 업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회사 내 소방시설업 관련 행정업무는 '소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소관기관을 직접 찾아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 ☑ 이 업무를 '소방시설협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는 예방 및 구급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민원인은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면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K사는 시설업 관리를 전담하던 담당하던 직원을 다른 전문업무에 투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신고등 행정업무 시간 단축에 따라 9억원  
비용 절감

#### 개선 전

- (소방서)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 업무 담당
- (한국소방시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경력관리 업무 담당

#### 개선 후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업무(소방서)와 시공능력평가·경력관리업무(소방시설협회) 민원처리창구를 소방시설협회로 단일화하여 민원인 신청불편 해소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15.7월)

# 083

의료기기 무균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

## 멸균의료기기 입증이 쉬워졌어요

해외에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멸균의료기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H사는 해외에서 인정되는 무균입증자료로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균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했고, H사는 다른 입증자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무균시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제품 출시일이 늦어지고 별도의 시험비용(시험비용 8,000만원)이 발생하여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 ☑ 다행히 최근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시 무균시험성적서 외에 다른 무균입증자료로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H사의 제품출시 기간은 21일이 단축되었고 시험비용(시험비 및 시험검사비)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체감



업체의 제품출시 기간 단축(21일)으로  
무균시험검사 비용 연간 35억원 절감 예상

### 개선 전

- 품목허가 시 멸균 의료기기의 멸균 여부 확인을 위해 무균시험성적서만 인정

### 개선 후

- 무균시험성적서 외에 해외에서 통용되는 무균입증자료도 인정 가능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7월)

# 084

상업용 지도 제작업체의 심사 부담 경감

## 지도 심사 간소화... 빠른 업그레이드!

“지도제작에 있어 국토변화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지도를 발행하기 전 지도간행심사 수탁기관의 심사를 받아도 조금이라도 수정·보완하였을 경우에 또 수정간행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사비용도 부담되고 처리기간도 길어 지도제작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지도 간행심사시 16개(세부사항 35개) 항목을 심사하던 것을 4개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수수료를 50% 인하하고, 수정·보완의 경우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도 제작업체가 신속한 공간정보를 수수료 부담 없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15년 기준, 영세 지도제작업체의 연간 수수료 약 2,800만원 부담 경감

#### 개선 전

- 지도간행 시 행정경계 등 16개 항목 심사

#### 개선 후

- 지도간행 심사항목을 4개 항목으로 축소, 간행심사수수료 약 50% 인하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6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 085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시장 진입완화

## 코넥스시장 문턱 낮추니 투자자도 기업도 활기 가득~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개인투자자에겐 코넥스 시장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A씨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코넥스시장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투자운용액으로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요건인 3억원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어 실망했습니다.

요즘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코넥스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3000만 원 이하 소액거래 전용계좌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풀린 덕분입니다. 투자자 뿐 아니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매출 10억원 기준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이 폐지되며 상장기업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이후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장(場)으로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상장기업 수 증가(21 → 88개사),  
시가총액 증가(0.5조 → 4.1조)

### 개선 전

• 코넥스 시장 진입시 3억원 기본예탁, 매출 10억원 등 엄격한  
상장요건으로 투자 제한

### 개선 후

• 코넥스 시장 진입시 기본예탁금 하향(3억원→1억원) 및 매출  
10억원 등 외형적 상장요건 폐지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15.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6)

금융위원회

# 086

가구원자재 수입자명 번들단위 표기 허용

## 한 장, 한 장... 번거롭던 표기 목재 묶음에 표시하면 끝!

“매번 포장된 원자재 묶음을 풀어서 일일이 수입자명을 표시하고 다시 포장을 하려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가구원자재를 수입·유통하는 K업체 대표의 고충입니다. 섬유판과 파티클보드는 대부분 묶음단위로 수입·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자명을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K업체로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매번 묶음을 해체한 후 수입자명을 표시하고 재포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K업체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수입자명 표시작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낱장별로 표시하지 않고 묶음단위로 수입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현실에 맞는 규제개선 덕분에 가구원자재 수입업체들이 더욱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섬유판과 파티클보드를 매년 1,260㎡  
수입하는 K업체 연간 3억원 비용 절감

#### 개선 전

- 파티클보드, 섬유판 각 장마다 수입자명 표기

#### 개선 후

- 가구 원자재 각 장마다 수입자명 표기를 대신하여 묶음(번들) 단위로도 가능
-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15.6월)

## 087

중소기업 M&amp;A 특례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기업,  
보다 간편한 절차로 M&A 가능!

“M&A특례 적용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M&A 활성화의 장애요인입니다.” 그동안 벤처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합병절차 간소화,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등 M&A특례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일례로 취업포털을 운영하는 S사는 재능기부 플랫폼을 보유한 A사의 노하우를 접목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싶었으나 소규모 간이합병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소규모 합병 특례대상이 벤처기업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S사는 벤처·이노비즈기업 소규모 합병 절차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 방식으로 A사와의 M&A를 진행했습니다.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대상이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된 덕분입니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더 많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M&A를 통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은 물론, 중소·벤처 투자자금 회수 원활화 및 창업·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소규모·간이합병 확대 ('14년 15건 → '15년 21건)로 창업·투자 활성화

## 개선 전

- 중소기업 M&A의 특례대상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한정

## 개선 후

- 중소기업 M&A의 특례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이외 이노비즈 기업까지 추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15.5월)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481-3974)

중소기업청

# 088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온라인 제출

## 이제 직접 구청에 갈 필요 없어요

중소기업인 A식품회사는 일반 소비자 판매 제품과 제조업소에 납품하는 원료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신제품 생산과 납품업체 주문을 위한 '품목제조보고'를 수시로 해야 했습니다. 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매번 시간을 내서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식약처에서 국내 생산 제품의 원재료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품목제조보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품목제조보고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민원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절차 간소화로 28,787개 업체('14년) 불편 해소

### 개선 전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품목제조보고를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 제출

### 개선 후

- 전자민원 기능을 통해 품목제조보고를 온라인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 ▶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지침」 개정('15.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형재활기과 (043-230-0404)



## 089

위해도 낮은 전자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면제

인증비용 부담 없이  
전자제품 수입합니다!

“USB나 건전지 전원제품은 위해가능성이 낮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디지털체중계 등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는 A씨는 막막했습니다. 전자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품 당 150만 원 정도의 시험비용이 무척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8개 항목에 달하는 시험을 받아야 하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 이제 A씨의 고충이 해소됩니다. USB 또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완료된 것입니다. 우선, USB/건전지 전원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는 제품의 시험항목이 축소돼 시험비용이 50만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USB/건전지 전원제품 중 디지털체중계처럼 단순계산·계측용 제품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도 시장판매가 가능해져 시험비용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 현장체감



제품별 70~150만원의 시험소요비용 절감



## 개선 전

- 위해도 낮은 전자제품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



## 개선 후

- USB/건전지 전원사용 제품 중 위해가능성 미약한 제품은 적합성 평가 면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15.3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과 (02-2110-1981)



미래창조과학부

# 090

사업장 폐기물 인수·인계 내역 입력기한 연장

## 불필요한 폐기물 과태료는 그만!

“일이 바빠서 하루 깜빡한 걸로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 좀 억울하네요”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L씨는 얼마전 사업장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 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을 넘겨서 환경부에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운반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 A씨와 같이 바쁜 업무 때문에 입력기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업자들은 억울한 심정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력 기한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남에 따라 입력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업자들은 2일 중 더 여유로운 시간을 선택해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입력기한 연장에 따른 사업자 과태료부담  
4.5억원 경감



### 개선 전

•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  
1일 이내



### 개선 후

• 사업장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  
2일 이내로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3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0)

환경부

# 091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 창업기업, 나라장터를 누비다!

수중펌프를 생산하는 A기업은 창업한지 3년 된 회사입니다. A기업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 했으나, 납품실적이 2건 밖에 없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창업 3년차란 이유로 납품실적을 면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각종 계약체결 시 지원하는 창업초기기업의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창업초기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 완화, 전용물 등재, 2단계 경쟁에서 가점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창업 초기 기업이 납품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15.7월 기준 MAS 공급실적 875억원 증가 ('14년 531억원→'15년 1,406억원)

#### 개선 전

- 납품실적 제출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 범위를 창업 2년 이내 제조업체로 한정

#### 개선 후

- 창업초기기업 인정 범위를 제조,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창업 2년 이내 기업은 납품실적 제출 면제, 창업 3~5년 기업은 실적 제출 기준완화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평가 가점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15.3월)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070-4056-7266)

조달청

# 092

창업기업,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부담 사라지니, 공장 세울 돈 넉넉하네!

☞ 금속단조제품 도매업으로 4년간 사업을 해온 A씨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직접 제조에 뛰어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을 세울 농지를 마련하고 전용(轉用)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공장을 설립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3년 동안만 면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인 6천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는 공장설립을 포기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공장설립시 농지보전 부담금이 기존의 3년에서 5년간 면제로 확대되었고, A씨는 농지보전부담금 6천만원을 절감하여 꿈에 그리던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 체감



창업 4~5년차 기업의 공장설립 부담완화로  
신규투자 활성화

#### ☹ 개선 전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공장설립 부담금 3종에 대해 3년간 면제

#### ☺ 개선 후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공장설립 부담금 4종에 대해 5년간 면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15.2월)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중소기업청

# 093

장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 인생은 50부터! 장년인턴 활용 길 열린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작은 기업이다 보니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업종에 해당하여 ‘제품펌웨어 개발자’를 장년인턴제를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희망이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 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들은 장년인턴을 활용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존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 등은 50세 이상 장년인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장년 미취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장 체감



중소기업 장년인턴 : '15년 58명 채용

### 개선 전

- 중소기업 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을 피보험고용자수 5인 이상으로 한정

### 개선 후

- 일부 지식산업업종(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장년 인턴 지원
- ▶ 「중소기업 장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개정('15.2월)

# 094

벤처·창업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준 완화

## 부채가 있어도 R&D 자금지원 가능합니다!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에 매진하던 벤처기업 A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R&D자금 신청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해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1,000%를 넘겼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다행히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3년차 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부채비율에 따른 R&D 참여제한 예외기준을 기존 창업 2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 A사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하여 R&D자금을 신규 지원받았으며 현재 해외 수출을 목표로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창업 2~3년 초기기업 15개사 29억원 R&D 자금지원 혜택

### 개선 전

- 중소기업 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을 피보험고용자수 5인 이상으로 한정

### 개선 후

- 일부 지식산업업종(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장년 인턴 지원
- ▶ 「중소기업 장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개정('15.2월)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4)



# 095

기업 부채비율에 따른 정부 R&D 참여 제한 폐지

## 정부 R&D 문턱 낮추니 기술력 있는 기업 참여 이끈다!

“벤처기업으로선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다보면 창업 초기부터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R&D사업의 문턱은 너무 높네요.” 벤처기업 대표 J씨의 말입니다. J씨의 회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기업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부채비율 500% 미만, 유동비율 50% 이상이라는 재무기준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J씨의 회사처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졌음에도 재무상황이 열악했던 기업들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지침을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준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 R&D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15년 지침 개정 후 벤처·창업 기업들이 정부 R&D 과제신청 및 수행중

#### 개선 전

-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은 정보통신·방송 R&D사업 지원불가

#### 개선 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지원 제외대상 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관련 조항 폐지
-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개정('15.1월)

# 096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의 길... 규제개선으로 일방통행!

☞ 중소기업 대표 H씨는 운이 좋게도 대기업으로부터 신규 물량을 대량 수주하였습니다. 기존의 생산설비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한 H씨는 설비 증설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비해 안정적인 금리와 대출기간을 고려해 결정했지만 각종 신청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 지자체 등을 직접 돌아다니는 건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정책자금 신청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신청자가 각 기관을 직접 돌아다닐 일은 없어졌습니다.



### 현장체감



중소기업 서류 준비 비용 연간 12억원 절감

#### 개선 전

- 중소기업이 자금 신청서류를 관공서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

#### 개선 후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행정정보·세무정보·금융거래 확인서를 직접 조회, 중소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감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개선('15.1월)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중소기업청

# 097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 연대보증 부담 풀리니 정책자금 지원 속속!

경기도에 소재한 케이블생산업체 대표 J씨는 공장 확장이전과 설비 증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연대보증 입보 부분에서 다소 부담을 느낀 J씨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15년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시행으로 우수한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덕분에 양호한 평가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당초 기준으로는 0.6%P의 가산금리조건부로 상당한 금리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금리 부담 없이 대출금액 2,540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아 연간 약 1,524만원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J씨는 회사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공장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연대보증 자동면제,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815건 3,400억원 연대보증 면제혜택

#### ☹ 개선 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1~2등급 0.4%, 3~4등급 0.6%, 5등급 0.8%)

#### ☺ 개선 후

- 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연대보증 자동면제 구간 신설 및 가산금리 인하 (1~4등급 가산금리 없이 연대보증 자동면제, 5등급 창업기업 0.5%로 인하)

▶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관리요령」 개정('15.1월)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중소기업청

# 098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클릭 한 번으로 발급 완료!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공공입찰 이외의 지원시책은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출력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고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복잡한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던 것을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온라인화로 서류제출비(113,000건),  
인건비 등 680억 절감

### 개선 전

중소기업확인서는 오프라인으로 공공기관입찰용으로만 발급

### 개선 후

중소기업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용도 상관없이 발급 가능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정('15.1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중소기업청

# 099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받은 기업의 ‘벤처기업’ 허용

##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받아도 당당히 ‘벤처기업’ 인정받아요!

“해외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은 국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받은 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니,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SNS기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인 V사 대표의 말씀입니다. V사는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창업 3개월만에 미국 벤처투자회사로부터 300원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국내 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V사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사실만으로 벤처확인을 받아 수도권 창업기업으로서의 세금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해외벤처캐피탈의 투자도 벤처확인투자로 인정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덕분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벤처확인을 받기위해 참여야하는 행정적인 낭비 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해외 투자 받은 3개(15년)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며 법인세·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 개선 전

• 해외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음

### 개선 후

• 해외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외국투자회사)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제감면 혜택 등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1월)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5)

중소기업청

# 100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기준 완화

## 냉장운반차량 3대만 보유하면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OK!

“대체 왜 냉장운반차량을 5대나 보유해야 하나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시작하려는 H씨는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준비면서 몇 가지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설장비기준에 따라 냉장운반차량 5대를 구비해야 하는데, 냉장운반차량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영세업자인 H씨가 기준에 맞춰 장비를 구비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냉장운반차량 수가 기존 5대에서 3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36개소 대상  
총 72대 감차 효과로 14.4억원 절감

#### 개선 전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냉장운반차량 5대 이상 구비

#### 개선 후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냉장운반차량 3대 이상으로 구비조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2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0)

환경부

# 101

개인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 폐지

## 개인기업도 열정만 있다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가능!

기계장비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꿈꾸던 창업을 위해 정년퇴직을 4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인근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문의했는데 해당 센터는 법인만 입주가 가능하며 예비창업자로서 입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A씨는 결국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사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최근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정보를 접했고, 입주절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평가를 받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입주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창업보육센터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회의실, 대학 내 공용장비실, 도서관, 식당, 카페, 은행ATM기기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총 274개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선으로 개인기업 등 창업 초기기업의 입주 혜택 제공

#### 개선 전

-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법인전환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

#### 개선 후

-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법인전환 조건 폐지
- ▶ 「창업보육센터별 자체 운영규정」 개정('14.12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13)



## 똑같은 전자파 관련 시험을 두 번에 걸쳐 받으라고요?

☞ “의료기기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또 전파법 인증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왜 유사한 시험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N씨는 답답합니다. ‘의료기기법’에 의해 허가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수입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료기기법’ 허가를 받을 당시의 시험항목과 유사한 전자파 관련 시험이 ‘전파법’에 따른 시험에도 속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N씨는 이런 전자파 중복시험은 불필요한 규제라 생각했습니다.

☑ 이제 A씨의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미래부와 식약처 간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일치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취득한 경우엔 ‘전파법’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중복시험 해소를 통해 총 소요기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사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빨리 접하게 될 것입니다.



### 현장체감



인증 및 시험비용 연간 약 135억원 절감.  
시장출시 기간 1~2주 단축



### 개선 전

- 식약처와 미래부가 ‘의료기기 관련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 기준’을 별도로 규정



### 개선 후

- ‘의료기기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기준’을 개정하여 미래부, 식약처 기준 일치

▶ 「전자파 장애방지 기준고시」 개정('14.11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과 (02-2110-1981)



미래창조과학부

# 103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절차 간소화

## 위험도 낮은 체외진단용 시약, 허가 기간이 빨라졌어요!

“위험이 낮은 시약은 좀 더 빨리 허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체외진단용 시약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는 B씨는 체외진단용 시약을 허가받는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료기기와는 다르게, 체외진단용 시약은 등급과 무관하게 매번 허가에 필요한 7가지 자료를 제출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체외진단용 시약 허가 시 제출자료를 다른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체외진단용 시약 제조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B씨는 체외진단용 시약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 관련 제품의 시장진출 시기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허가절차 간소화로 1,599개('15년) 제품 허가 받아 조기 시장 진출



### 개선 전

- 체외진단용 시약은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허가자료 제출
- \* 위험도가 낮은 2등급 시약이 위험도가 높은 3~4등급 시약과 동일한 허가 요건(제출 서류 7가지) 적용



### 개선 후

- 위험도가 낮은 2등급 시약의 경우에는 제출서류(7가지→4가지) 간소화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4.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식품의약품안전처

# 104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중복신고 개선

## 일용근로자 이중 신고, 이제 한번이면 OK!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절차가 참 번거롭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고충입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신고가 면제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용 모바일 ‘앱’이 개발·보급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층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국세청 신고 관련 부담 228억원 경감,  
158만 6천건(14.4분기~15.2분기) 국세청  
신고대체

#### 개선 전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매분기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개선 후

- 고용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국세청 신고를 면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4.9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1-3709)/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

고용노동부 NTS 국세청

# 10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 비싼 저작물, 더 이상 고민 NO! 공공저작물이 있잖아요~

☞ 벽지 제조업체 H사는 벽지 문양 디자인을 위해 매년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다보니 생산단가가 올라 매출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전통문양을 발견해 디자인에 활용해보려 했지만 저작권법 등 관련규제로 활용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 이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H사와 같은 고충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보고서나 사진, 음악, 영상, 디자인 소스 등의 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자료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il.or.kr>)에서 사진, 음악, 영상, 어문 등 종류별로 약 280만 건의 저작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장체감



'15.12월 기준 공공저작물 약 500만건 개방

#### 개선 전

•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해당 기관허락 받아 이용 가능

#### 개선 후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거나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이용시, 출처표시를 하고 자유로운 이용 가능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14.7월)

# 106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갱신기간 확대

## 혁신형 기업 타이틀, 쉽게 떠나보낼 순 없죠!

“인력이 없어 하루하루 정신없는 소기업에게 부담스런 규제네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Z사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료 3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갱신평가 신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신평가보다 30만원이 더 비싼 신규평가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 이제 Z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인증 ‘이노비즈’와 경영혁신 인증 ‘메인비즈’ 갱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만 해 기업 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전 인증 만료 후 30일까지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14.8월 ~ ’15.7월)

수혜기업 2,361개사, 4.3억원 비용 절감

#### 개선 전

- 유효기간 만료전 35일전까지 갱신평가 신청 가능

#### 개선 후

- 유효기간 만료후 30일까지 갱신평가 신청 가능
- ▶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 개정(’14.7월)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96)

중소기업청

## 107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실수로 소멸된 특허권,  
걱정 마세요!”

“직원의 실수로 특허료를 미납했는데, 사업 준비단계란 이유로 특허권 회복이 안 된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 K씨는 누에 성분을 이용하는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특허료 미납으로 신기술 특허권이 소멸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회복 신청을 했으나 ‘실시 중인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 ☑ 그동안 실수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될 경우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즉 사업을 준비 또는 계획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권이 소멸돼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했으며 특허료의 2배만 납부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 현장체감



7.1억원 부담 경감

## ☹ 개선 전

-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이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제한되고,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해야 회복 신청가능

## 😊 개선 후

- 특허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 회복 가능

▶ 「특허법」 개정(‘14.6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 특례보증을 통해 재도전 기회 제공!

☞ 각종 생활용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수출기업을 운영하던 D씨. 국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D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D씨는 지인들로부터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을 추천받았고, 창업 자금을 구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추가자금을 받아 재창업을 했고, 당연한 기업인으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 체감



성실실패자 6개 업체 재도전을 위한 1억원 특례보증을 재기지원

### 개선 전

- 도덕적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가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역 신보 보증 제외

### 개선 후

- 도덕적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가 재창업하는 경우 특례보증 가능
- ▶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 개정('14.5월)

# 109

휴업·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 폐업 후 보증유예 덕에 실패 딛고 우뚝 일어섭니다!

🗨️ 치킨집을 운영하는 L씨는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료비와 인건비로 인한 손실만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집을 열면서 받은 대출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폐업을 하지도 못하고, 남지도 않는 장사를 계속 할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행히 L씨는 친구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 경영 의지가 있고 재창업 가능성이 높은 '휴·폐업자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L씨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고 재단 직원과 상담하여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체감



재기 가능성이 높은 휴·폐업 기업 연간 44개 업체에 재도전 기회 부여

### ☹️ 개선 전

- 보증지원기업이 휴·폐업 시 보증기한 연장 불가

### 😊 개선 후

- 경영의지가 있고 재창업 가능성이 높은 휴·폐업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기한연장 등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 개정('14.5월)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110

청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 유망업종 5인미만 기업에 청년인턴제 허용

“청년인턴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 회사같이 규모가 작은 업체는 시행지침에 가로막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청년인턴제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제완화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고용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대상기업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유망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 현장체감



중소기업 청년인턴 :  
'14년 502명, '15년 1,165명 채용

### 개선 전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대상기업을 피보험고용자수 5인이상으로 한정

### 개선 후

- 일부 지식산업업종(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청년 인턴 지원
-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개정('14.4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46)

고용노동부

# 111

중소기업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

## ‘창의적’ 기업에 ‘창조적’ 부담 경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되는데,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시책에 따라 600만원 유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감면되는 연차등록료만큼을 직원 복지에 쓸 계획입니다.

- 개인·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30% 일괄 감면됐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혜택도 부여했습니다.



### 현장체감



(‘14.3월~’15.7월) 중소기업 대상 약 116억원 등록료 부담 경감

#### ☹ 개선 전

- 중소기업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시 최초 3년분에 한해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감면 없음

#### ☺ 개선 후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4~6년분 등록료 30% 일괄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4~6년분 등록료 20% 추가 감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14.3월)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 112

우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 중소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날로 심해져가는 자금난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업한지 10여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계약의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중소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한 중소기업(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은 줄게 됐고 무사고 유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은 촉진됐습니다.



### 현장체감



('14.2월~'15.7월)  
3천여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50여억원  
보험료 절감

#### 개선 전

- 관련 제도 없음

#### 개선 후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보증보험을 장기간 거래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10%인하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4.2월)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41)

 금융위원회

# 113

창업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더 쉽게 설립합니다!

“대부분 창업초기 소기업엔 고학력 연구 인력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이 어렵습니다. 기업대표가 주도적으로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줄 순 없을까요?” 기술창업기업 D사 대표의 요청입니다. D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대표자는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D사 직원 A씨는 기능사자격을 따고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기술력을 갖췄지만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이유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 이제 D사 대표와 직원 A씨의 고충이 한 번에 해소됐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연구원 등록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우선,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한하여 대표자의 연구원 겸직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기능사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 현장체감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소설립 16.6% 확대, 기능사 소지자 연구원 등록 137명

#### ☹️ 개선 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는 연구원으로 등록 불가능

#### 😊 개선 후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자의 연구원 겸직허용, 연구개발 4년경력 기능사의 연구원 등록 허용 등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4.1월)

# 114

뿌리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 인력난 해소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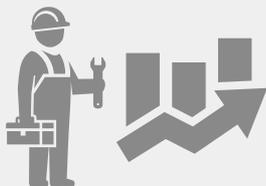
☞ 선박기자재, 산업설비부품 등 제조업체인 D사는 근로자 수가 60여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 주조 전문 뿌리산업\* 기업입니다. 생산공정이 위험하고 업무강도가 높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늘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지만 정해진 '고용한도'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

- ☑️ 외국인력 도입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기존 고용한도보다 20%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이 이전보다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301개 뿌리산업 사업장에서 639명 추가 고용('15.9월 기준)

#### 개선 전

- 뿌리산업의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20% 상향업종 : 인력부족율이 300명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율보다 높은 경우

#### 개선 후

- 뿌리산업의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 사업장을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외국인고용허용 인원 20% 상향업종 : 뿌리산업 추가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14.1월)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고용노동부

# 115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

## 기술력만 있다면 보증인 없이도 창업 도전!

“보증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손사래를 쳐서 힘들었죠” 고속영상 전송장치 사업을 계획하던 K씨의 경험담입니다. 공대 박사과정을 거치며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한 K씨는 기술보증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인을 찾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이처럼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업이 모든 법인 대표자에게 보증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도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요즘 K씨는 연대보증인 없이 기술력과 성장 비전에 대한 평가로 보증대출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규제완화로 인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도 연대보증 부담 탓에 창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현장체감



'14.1~'15.7월 간 313개 창업기업에 연대 보증 입보제외, 230억원 신용보증 지원



### 개선 전

-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은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1인에게 연대 보증 입보 요구



### 개선 후

- 창업 후 1년 이내, 전문가가 창업한 3년내의 기술력 또는 신용도 우수기업은 창업자 연대보증 입보 면제
- ▶ 「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 운용지침」 개정('14.1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2)



금융위원회

# 116

창업지원사업 서류 표준화

## 예비창업 발목 잡던 복잡한 서류 OUT! 간소화로 가벼워진 창업 첫 걸음

☞ 예비창업자 D씨는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하고말았습니다. 열정적인 D씨는 같은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와 서류의 형식이 이전의 지원사업과 너무 달라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예비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시 공통되는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기존의 '한글'프로그램 규정 외에 다양한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통서류 전담기관을 확인하는 등 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창업지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 🎯 현장대기



지원 서류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준비 시간 단축

### ☹️ 개선 전

• 창업지원사업별로 상이한 사업계획서 신청양식, 서류작성 시 한글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제한

### 😊 개선 후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양식 표준화,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 등 행정절차 간소화

▶ 「사업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K-Startup 시스템」 개편('16.3월)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967)

중소기업청

# 117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 진료는 의사에게 정보관리는 보안전문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 보안이 중요하단 건 알지만 중소병원으로선 보안시스템이나 보안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죠.” 비용부담으로 진료정보에 대한 보안정책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A병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높은 보안수준을 바탕으로 정보 보관·관리를 하는 중소 IT업체 B사는 협소한 시장사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신규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A병원은 저비용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B사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전문업체로 재기하게 됐습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전문기관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덕분입니다. 병원은 보안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하고, 외부보관 업체는 매출증대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규제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 현장대기



소규모 의료기관등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관련 비용 절감

### 개선 전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내에서만 관리·보관

### 개선 후

- 전자의무기록을 내부보관 이외에 외부보관도 허용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6.2월)

# 118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쌀가루, 고춧가루 마음껏 활용하세요!

“한과 제조를 하려면 공장에서 쌀을 직접 제분하라니,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요?”  
 농업진흥지역에서 누룽지 공장을 운영하던 D씨는 한과 제조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선 해당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던 규정에 부딪혔습니다. 즉, 농산물인 쌀을 원료로 누룽지를 만드는 건 가능했지만, 가공품인 ‘쌀가루’를 원료로 한과를 만들려면 반드시 외부 시설이 아닌 D씨 본인의 공장 내에서 쌀가루를 생산해야 했던 것입니다.

최근 D씨는 부푼 마음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쌀가루, 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이뤄진 덕분입니다. 단순 가공품을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6차산업도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대기



농업진흥지역 내 1차 가공시설 설치 확대로  
6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개선 전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타시설 생산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처리시설 설치 불가

#### 개선 후

-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타 시설에서 생산한 1차 가공식품 (고춧가루, 쌀, 밀가루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 설치 허용

▶ 「농지법 시행령」 개정('16.1월)

# 119

부담금 납부수단 다양화

## 꼭 필요한 부담금만!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이나 폐기물부담금 같은 부담금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도 걱정인데 죄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니 훨씬 편리해지겠네요.” 중소기업 대표 H씨의 말입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며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 납부방식이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됐습니다. 또한,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요율도 국세 가산금(체납액의 3%)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검증절차도 강화해,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편의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한편, 꼭 필요한 부담금만 존치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 현장대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에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

#### 개선 전

- 환경개선 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 각종 부담금\*은 현금납부만 가능
- \*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 개선 후

- 기업의 부담금 납부방법으로 신용·직불카드 허용
-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15.12월)

# 120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완화

## 세관 신고 절차 건너내니, 막힌 돈줄 땡 돌린다!

“매달 10억원 가량의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세관에 매달 평균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못할 땐 은행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수 밖에요...”  
중소제조업체 A사 대표의 하소연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A사는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냈다가 최소 40일 이상의 통관 절차 이후에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제로 큰 경영부담을 겪었습니다.

- ✔️ 앞으로 A사의 자금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사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자금 1억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은행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 경영비용을 크게 줄이게 됩니다. 과도한 세금규제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 🎯 현장대기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 완화

#### ☹️ 개선 전

- 수입재화를 원재료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 사업자는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

#### 😊 개선 후

- 수입재화를 원재료로하는 제품의 제조·수출 사업자는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하도록 개선

▶ 「부가가치세법」 개정(15.12월)

# 121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FTA활용, 세관장 확인으로 간편하게 시작!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해도 고객사가 신뢰하지 않고 원재료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니,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A주회사 대표의 말입니다. 고객사인 히터업체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기 위해 제품의 재료로 들어가는 주조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요구하면서 A사의 고충이 시작됐습니다. A사의 주조품은 동일한 모델·규격이 없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의 필수정보인 원재료 및 원가관리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고객사 대기업의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A사는 FTA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을 통해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도 인정받고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현장대기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 증명비용 경감 (연간 3억원) 및 FTA 활용 관세혜택 (연간551억원)

### 개선 전

- 수출물품의 생산자는 FTA활용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이 필수

### 개선 후

- 중소업체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편의를 위해 세관장의 원산지 (포괄)확인서 확인제도를 도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15.12월)

# 122

의료기기 영업자의 휴·폐업 신고절차 간소화

## 의료기기업체 휴·폐업 신고, 한 곳에서 끝냅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S씨는 요양을 위해 잠시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업 절차를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은 구청에서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쪽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말에 시간을 내서 세무서와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휴·폐업 신고서를 의료기기 영업자 관할 소재지의 주무관청으로 보낸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의 휴·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S씨와 같이 세무서와 구청을 모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주무관청 한 곳을 선택하여 휴·폐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 현장대기



휴·폐업신고 미비에 따른 과태료 (30~80만원) 부담 방지 및 영업자의 휴·폐업 신고 민원 편익 증대

#### 개선 전

• 의료기기 영업자의 휴·폐업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방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하고 세무서장에게도 별도 신고

#### 개선 후

• 세무서에 휴·폐업신고 한 경우 관할 소재지 주무관청에 신고 불필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5.7월)

# 123

측량업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의무 폐지

## 추가고용 부담 없이 공공측량 수행해요!

“사업자 신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추가고용을 할 여력도 없으니, 저희 같은 영세업체로서는 공공측량 진입 문이 너무 높아졌네요.” 측량업체 B사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소식에 낙담했습니다. 공공측량을 하려면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후 ‘건설기술용역업’까지 등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사업 등록 요건에 맞춰 특급기술자 및 기술자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B사에겐 없었습니다.

- ‘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용역업’ 3중 등록 부담으로 인해 낙담하던 B사의 고민이 풀렸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하지 않고도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측량업자만 등록된 업체도 한시적으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경과를 둬으로서, 영세측량업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 🎯 현장대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고용부담 약 1,865억원 경감

### ☹️ 개선 전

- 건설공사 측량용역수행시 측량업-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용역업을 3중으로 등록

### 😊 개선 후

- 측량업체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 종전 측량업자에 대해 '16.6.30.일까지 등록 유예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5.6월)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7)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24

대학·연구기관 실험실공장의 면적제한 폐지

## 커다란 실험실공장 가능하니 커다란 아이디어 쏟아진다!

“대규모 실험실 공장이 설치된다면 실험실에서 개발된 연구성고가 대량으로 제품화될 수 있을 텐데요...” A대학 관계자가 밝힌 아쉬움입니다. A대학은 창업 촉진을 위해 대학 내 대규모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포기했습니다. 실험실공장 설치를 위해선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면적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실험실 공장이란 벤처기업 창업의 촉진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동안 각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통적 면적 제한 탓에 A대학처럼 대규모 실험실공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험실공장 설치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활용할 통로가 넓어진 것입니다.



### 🎯 현장대기



대학의 물적·인적 인프라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신규투자

#### ☹️ 개선 전

• 대학·연구기관내 실험실 공장은 바닥면적 3,000㎡ 이내, 총면적은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속된 교수, 연구원만 설립 가능

#### 😊 개선 후

• 오염물질이 없는 첨단지식산업 등은 실험실 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 제한규정 폐지, 벤처기업의 창업자도 실험실 공장 설립 가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5.5월)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967)

중소기업청

## 12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 분야) 등록요건 완화

하수관로 전문업체로  
도약합니다!

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M사는 그동안 하수관로 시공·설계업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업체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기술진단 전문업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 분야와 '수처리' 분야 구분 없이 장비와 인력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로 분야의 사업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M사의 규모로는 등록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 다행히 관련규정이 개선되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업 등록요건 중 하수관로 분야가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분야의 장비·인력만을 만족하면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전문업체로 등록하여 관련업 종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M사와 같은 중소·영세기업은 기술진단 전문업 진입이 수월해지고, 등록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과 인력 운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대기

하수관로 관련사업자 T기업은



장비구입 비용  
1.5억원 절감



기술 인력 인건비  
2.1억원 절감

### 개선 전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업을 하려는 경우는 수처리 분야와 하수관로 분야의 모든 장비·인력 조건을 갖추어야만 함

### 개선 후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업에 대해 하수관로 분야의 장비·인력 요건만 갖추어도 등록 가능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15.2월)

환경부 생활하수와 (044-201-7146)

mev 환경부

# 126

산업단지 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기숙사 허용

## 산업단지 직원의 가족까지 배려합니다

☞ D기업은 국토의 균형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부지 내에는 1인실 기숙사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는 직원은 공장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공장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 직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취사 등 주거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건축물은 기숙사로 분류하도록 개선되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직원이 독립적인 거주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인력 확충이 가능해진 D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업투자에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현장대기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공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

### ☹️ 개선 전

- 산업단지 내 독립된 주거형태 가진 기숙사 금지

### 😊 개선 후

- 기숙사 요건 중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폐지
- ▶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1월)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국토교통부  
Korea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4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매상이 쑥쑥 올라 신바람 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부담은 낮췄습니다.

# 127

와이파이 전자파 흡수율 시험방법 간소화

## 스마트해진 신제품 평가방법으로 스마트폰 출시에 날개 달다!

“신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적합성 평가를 위해 88일이나 기다려야 하니 답답합니다.”  
휴대폰 제조업체 A사 직원의 말입니다. A사는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의 와이파이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1,100여 회나 거쳐야 했습니다.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를 위해선 제품에 탑재된 모든 기술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했기에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검증 절차가 매우 복잡했던 것입니다.

- ✓ 최근 A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와이파이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이 간소화된 덕분입니다. 와이파이 전자파흡수율 측정시 전도 전력값이 제일 높게 나오는 모드에서만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도록 규제가 개선되며 측정 횟수, 비용, 기간 모두 평균 80%이상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15.12~'16.1월 16개 인증에 대해 수수료 14.4억, 시험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신제품 조기 출시효과 13.3억



### 개선 전

- 와이파이 전자파흡수율 측정 시 모든 모드의 전도 전력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 개선 후

- 와이파이 전자파 흡수율 측정시 전도 전력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모드만 측정토록 완화
- ▶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개정('15.11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안전과) (061-338-4531)



미래창조과학부

# 128

벌채 후 수목재배로 복구를 대체

## 나무 벤 자리에 새로운 나무 심는데 산지복구 비용을 내라니요?

“소나무를 밤나무로 대체해 심으면 나무 종류만 대체됐을 뿐 산에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건데, 복구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임업인 J씨의 의문입니다. J씨는 본인이 소유한 산의 소나무를 벌채한 뒤 밤나무 재배지를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ha 당 5천만원이 넘는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단 소식에 선불리 시작 할 수 없었습니다. 산주의 입장에서 소나무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밤나무를 심어 임산물을 생산하겠다는데, 복구 의무를 지고 복구비까지 예치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제 J씨는 초기비용 부담 걱정 없이 밤나무 재배지를 조성 중입니다. 벌채를 한 후 밤, 잣, 감 등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나무를 심을 경우엔 복구 의무가 면제된 덕분입니다.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부담을 확 줄인 규제개선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수입 임산물에 대한 국내 임산물의 비용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임업인 J씨는 산지에 10,000㎡ 밤나무 재배로 5천만원 예치금 면제

### 개선 전

- 임목을 벌채하고 밤, 잣, 감 등 교목류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복구 의무 부과

### 개선 후

- 임목을 벌채하고 밤, 잣, 감 등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교목류를 식재하는 경우 복구 의무를 면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월)

# 129

산지 방목지 내 사료식물 재배 허용

## 소 키우며 사료식물도 재배하니, 청정축산물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수입 소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청정축산물 생산에 뛰어들었는데, 사료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직접 키운 청정사료를 먹인다면 더 좋은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텐데요...” 축산업자 M씨의 고충입니다. 한우 30두를 임업용 산지에서 방목 사육하고 있는 M씨는 방목장의 넓은 토지 일부에 사료식물을 재배하려 했지만 산지전용허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허가를 받기위한 준비서류도 복잡하고 실제 허가가 날지도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 축산업에서 총 생산물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을 줄인다면 축산농가의 경영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며, 대부분 산지축산 토지는 사료식물 재배를 위한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과거엔 임업용 산지에서 사료식물을 재배하려면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로 인해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에 필요한 사료를 재배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고, 축산비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 현장체감



한우 30두를 산지에 방목하는 A씨의 경우  
조사료 비용 연 1,000만원 절감

#### 개선 전

- 임업용 산지에서 사료 식물 재배 행위 금지

#### 개선 후

- 임업용 산지에서 사료 식물 재배 행위 허용
-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월)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2)



# 130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억울한 과징금 감면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억울한 영세사업자 고충 DOWN!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사간 청소년 때문에 과징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교육을 해 왔지만,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도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이 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검찰이 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구청장에게 선처를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 앞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보여주어 성인이라고 착각하여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원의 선고유예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1차에 한해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는 지침을 '15.10.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위·변조 신분증인줄 모르고 술·담배를 판매하여 억울하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입니다.



### 현장체감



52백만원의 과징금 부담 경감

#### 개선 전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술·담배 판매금지 위반사범 중 기소유예(또는 선고유예) 처분자에 한해 과징금을 1/2로 감경

#### 개선 후

- 1차에 한해 과징금 부과 대신 교육으로 대체
- ▶ 「영세사업자 고충해소 지침」 개정('15.10월)

# 131

개발제한구역 내 경량 판넬 설치 완화

## 일하다가 언제든 시원하게 씻으니 좋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D씨는 일을 하다보면 땀이 많이 나고 옷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가벼운 경량판넬로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물어보니, 비닐하우스의 뼈대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닐 재질로 된 것만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D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건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민원을 검토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세면장, 샤워시설 등 임시시설 설치 시 비닐 외에 경량판넬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D씨는 일하다 더울 때면 언제든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재질의 적정성 여부 등 법령해석에 관한 소모적 논란 민원 해소



### 개선 전

-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시설의 재질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 개선 후

-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을 철거가 용이한 경량판넬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5.9.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 132

고급택시 허용기준 완화

## 2,800cc 이상이면 고급택시 운행 가능!

고급 수입차를 소유한 L씨는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고급택시를 운행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상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종만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L씨의 차는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고급 모델도 3,000cc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이 L씨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고급택시 차종기준이 기존 3,000cc에서 2,800cc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대부분의 고급 차종이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씨는 본인의 차로 고급택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택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아슬란, K7, 벤츠S클래스 등 2,900cc 고급차량 허가로 200여명 신규 고용창출 및 100억원 이상의 투자

### 개선 전

• 고급택시 차종기준 : 배기량 3,000cc 이상

### 개선 후

• 고급택시 차종 기준을 배기량 3,000cc 이상 → 2,800cc 이상으로 완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5.9월)

# 133

포장육의 재포장일자 표시방법 명확화

## 제조일자와 포장일자 혼동하지 마세요!

최근 사업을 시작한 식육포장처리업자 L씨는 원료 포장육을 절단하여 재포장한 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어떻게 표시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원료 포장육 포장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재포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료제품의 제조일자 표시와 혼동이 없도록 원료를 절단하여 만든 포장육에 재포장일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료포장육의 제조일자와 함께 재포장일자를 병행 표기하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포장육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장체감



원료 포장육 제조일자 오인 · 혼동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 개선 전

- 포장육 재포장일자 표시방법 규정 없음

#### 개선 후

- 원료포장육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재포장에 명기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15.9월)

# 134

식품분야 무작위표본검사 민간검사기관으로 확대

## 신속한 통관심사, 신선한 수산물!

수입냉장수산물을 수입하는 S수산은 무작위표본검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제품 신선도 관리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무작위표본검사는 지방식약청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무작위표본검사 외에도 수입식품 정밀 검사 및 유통 식품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5일 정도가 걸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냉장수산물 수입자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해서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수입자는 검사기간이 단축되어 창고보관료가 절감되고 수입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더욱 신선한 수산물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장체감



S수산의 경우 검사기관 대폭 확대로 신속한 검사 가능(3일→2일)

#### 개선 전

- 무작위표본검사는 지방식약청에서 검사가 가능

#### 개선 후

- 무작위표본검사를 민간시험검사기관에서도 수행 가능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5.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검사실사과 (043-719-2151 / 043-719-2234)



식품의약품안전처

# 135

수박의 신선도 측정기준인 T자형 꼭지관행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 수박꼭지 OUT! 농민의 번거로움도 OUT!

“T자 모양으로 꼭지를 자르려면 가위질이 세 번인데, 몇 백개를 자르려면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수박농사를 하는 C씨의 고충입니다. T자형 꼭지가 유통되는 관행 탓에 운반 중에도 흑여 꼭지가 꺾이진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 수박에 달린 꼭지는 수박의 신선도와 당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꼭지 달린 수박 유통으로 많은 농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꼭지절단 수박 유통의 활성화는 농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수박의 신선도 기준이 '꼭지 절단 부분의 마른정도가 양호하고 과피가 신선한 것'으로 개선하고 꼭지를 짧게 자르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농민의 수고로움을 한결 덜었습니다.



### 현장체감



유통시 소요비용 177억원, 꼭지손상시  
가격하락비용 450억원 절감

### 개선 전

- 수박신선도 기준에 '꼭지시들' 여부가 있어 수확시 수박꼭지를 관행적으로 'T'모양으로 절단

### 개선 후

- 수박의 신선도 판단시 꼭지의 시들음으로 등급을 측정하던 기준을 제외

▶ 「농산물 표준규격」 제·개정('15.6월)

# 136

현황도로 등을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

## 법률상 도로 아니어도 현황상 도로 있으면 산지 이용 가능!

“문화재를 살리려는 일인데 규제에 막혀 답답합니다.” 안동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안동시는 안동댐 조성으로 수몰돼 이주한 군자마을의 멸실 문화재 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없던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추진 지역엔 사실상 도로가 나 있었지만 법률상 도로가 아닌 현황상 도로이기엔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국도나 지방도, 농로 등이 확보된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새로 도로를 내지 않고 기존도로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기존도로에 현황도로\*는 인정하지 않아 안동시처럼 사업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가 없거나 현황도로만 있어도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정했습니다. 문화재의 증개축, 농지 및 초지 조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지이용의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황도로 :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



### 현장체감



안동시 군자마을의 멸실 문화재 복원 사업이 산지전용 허가로 재추진(10억원)

### 개선 전

• 산지전용시 산지도로가 없거나 현황도로 이용하는 경우 허가 불가

### 개선 후

• 도로가 없는 지역 또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지역은 산지전용 허가 가능

▶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개정(\*15.4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2)



# 137

쌀 수출 추천서 제도 폐지

## 우리 쌀 글로벌 진출에 날개를 달다

“수출 제의를 받아도, 쌀 수출 기준이 워낙 까다로우니 맞출 수가 없네요.” 미곡처리시설 대표 H씨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쌀 100톤을 수출해 주길 제의 받았으나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어가 제시한 수출 가격이 정부가 정한 수출가격 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출추천서를 발급받고 수출 실적을 사후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도 걸림돌이었습니다.

- ☑ 쌀 수출추천제가 시행되던 과거엔 수출가격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의 8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출물량도 정부가 정한 범위에 따라야 하는 등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쌀 수출 추천제가 폐지되며 쌀 수출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출을 원하던 이들의 불필요한 수고도 덜고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쌀 수출량 246톤 증가 ('14년:1,992톤→'15년:2,238톤), 추천서 비용 1억 6,700만원 절감

#### 개선 전

- 정부가 정한 수출 가격과 물량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농식품부장관의 수출추천서를 발급 받아야만 쌀 수출이 가능

#### 개선 후

- 수출추천서 없이 가격, 물량제한 없이 수출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및 수출추천 고시폐지('15.3월)

# 138

농업인 맞벌이 부부자녀 어린이집 입소절차 개선

## 농사짓는 워킹맘의 양육 걱정 끝!

“맞벌이 부부임에도 농업인이란 이유로 우선입소 혜택을 못 받는 게 억울하네요” 여성농업인 K씨는 최근 걱정이 큼니다.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싶었는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입소 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고, 바쁜 농사철엔 아이를 바라다 줄 시간도 없는데, 비싸고 멀리 떨어진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 이제 맞벌이 농업인부부들의 고충이 해결됐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이 농업인 맞벌이 증명서류로 인정되도록 어린이집 입소절차가 개선된 것입니다. 농업인부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받게 돼 여성 농업인들이 맘 놓고 농사에 집중한다면 농가의 소득도 오를 것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맞벌이 농가 육아부담 감소 → 농업생산성 증대('15년 276명, 3.2억원, 농경연)

### ☹️ 개선 전

-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위한 농업인 부부의 취업증명이 어려움

### 😊 개선 후

- 농업인 부부도 '농업인 확인서'와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맞벌이 부부로 인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15.3월)

# 139

소규모 맥주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 더 다양해진 '하우스 맥주' 제조장서 영업장까지 직행!

“취향 따라 다양한 맥주를 찾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더 많은 종류의 하우스맥주를 팔고 싶은데 배관을 연결할 돈이 부족하네요.” 맥주제조자 J씨의 말입니다. J씨는 맥주제조장과 영업장을 함께 운영하며 직접 만든 하우스 맥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판매장으로 이동하려면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요즘 J씨는 더 다양한 맛의 맥주를 생산해 제조장에서 영업장까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배관연결의무가 폐지된 것입니다. 배관 설비부담을 해소한 규제개선 덕분에 하우스맥주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소비의 취향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소규모 맥주제조자 49개사 배관연결 비용 절감

#### 개선 전

•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

#### 개선 후

• 제조맥주를 제조장→판매장 이동시 배관 통하지 않고도 이동 가능토록 개선

▶ 「주세법 시행령」 개정('15.2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기획재정부

# 140

선도농가실습 자격을 귀농인에서 청년까지 확대

## 귀농의 시작, 농사 베테랑과 함께 든든하게!

“밑천도 기술도 없이 귀농 하려니 막막하네요. 다른 딸기농장에서 몇 달만 제대로 일을 배워봤음 좋겠는데요...” 귀농을 결심한 J씨는 농사일을 배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아직 귀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 이제 J씨는 귀농연수생이 되어 선도농가로부터 5개월간 딸기 농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의 연수지원 신청자격이 40세미만 청년까지 확대된 덕분입니다. 이미 농업으로 성공한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일정기간 일하면서 현장실습교육을 받으며 농업인으로서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험



'15년 2~30 청년층이 선도농가 현장실습 참여(112명)

'16년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300명) 추가지원 → 젊은농촌 조성

### 개선 전

- 선도농가 실습지원 신청자격이 귀농귀촌인(5년 이내)으로 한정

### 개선 후

- 선도농가 실습지원 신청자격을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으로 확대

▶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지침」 개정('15.1월)

# 141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카드 수수료 줄어드니 장사할 맛 납니다!

“매출의 상당부분이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로 빠져나가 등골이 땀 지경인데요... 매출액은 20만원 늘었을 뿐인데 카드수수료율이 확 높아지는 건 억울하네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N씨의 하소연입니다. 올해 연매출이 2억원을 넘으며 작년까지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젠 2억원~3억원 사이의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다보니 N씨처럼 수수료 우대가 필요함에도 문턱 효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개선되며 전체 가맹점 중 약 86% 점포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28만개의 카드가맹점에 '15년 한해 680억원 혜택

#### 개선 전

•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대수수료율(평균 수수료율의 100분의 80이하) 적용

#### 개선 후

#####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 연매출 2억이하 : 1.5~2.7% → 평균수수료율의 80/10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 연매출 2~3억 : 2.7~3.0% →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또는 2%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5.1월)

## 142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제도 실시

## 영업에 지장 없이 온라인으로 보증업무 가능해요!

강원도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보증부 대출의 만기일자가 다가오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대출연장에 앞서 보증서의 기한연장을 위해 1시간 거리의 춘천에 있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하고 대출은행에도 들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A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 무방문 · 무서류 기한연장제도 시행으로 보증료 입금만 하면 보증기한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증료만 입금하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보증료 납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바로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연장시 보증료까지 수납해줍니다.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기업 · 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소상공인 81억원 비용 절감

### 개선 전

- 소상공인이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할 경우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함

### 개선 후

- 기한연장시 지역신보는 방문할 필요없이 보증료 입금만으로 기한연장 가능

▶ 「녹취 등을 활용한 기한연장처리기준」 개정('15.1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중소기업청

# 143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간소화

## 실측도 대신 임야도 제출하니 비용이 확 줄었어요!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내용을 파악하는데 임야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실측도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측량업자에게 실측도 작성을 의뢰하려면 250만원이나 들어서 부담이 커요.” 임업인 Y씨는 불만스럽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약초 재배단지 면적을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면 실측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Y처럼 측량비용으로 부담을 떠안던 임업인들의 고충이 덜어졌습니다. 임산물재배 등 경미한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실측도 대신 임야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산지에서 경미한 행위를 하는데도 측량수수료 및 소요기간 경과로 임업경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출서류가 한층 간소화돼 임업인의 불편도 비용도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 현장체감



연간 9.2억원 측량 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 개선 전

-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실측도 제출

#### 개선 후

- 경미한 신고 행위인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실측도대신 임야도 제출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4.12월)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2)



# 144

개발제한구역 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허용

## 나만의 농기계 창고가 생겨 신명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B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농기계 보관을 위한 창고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농업회사법인만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B씨는 고가의 농기계들을 노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굶은 날씨로 인해 기계가 손상되거나 분실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B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영농 종사자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농기계의 규모에 맞는 창고를 설치하여, 분실이나 파손 걱정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고가의 농기계 분실 및 파손 예방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 불편 해소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허용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를 농업회사법인→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4.11월)

# 145

개별포장 안 해도 닭·오리고기 판매 허용

## 전통시장의 현실여건을 고려한 닭·오리고기 진열·판매 가능!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파는 K씨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에 따라 닭고기를 포장하지 않고 진열하여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닭·오리고기는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의 단속이나 파파라치의 신고에 걸려 과태료를 납부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생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고 싶어 했습니다. K씨는 규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존 판매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닭·오리고기는 도살·처리 과정에서 부패 변질이 쉽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도축장에서부터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까지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와 같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일정한 위생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서는 포장을 뜯고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상인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전국 1,372개 전통시장에서 약 6,860개  
업소 영업 편의 증대

### 개선 전

- 닭·오리고기는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업소에서 판매

### 개선 후

-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 가능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0월)

# 146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허용

##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 번에 우리 집까지!

“큭 배달은 안 되나요?” 전통시장에서 떡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먼 곳에 사는 단골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만 즉석 식품 배달이 허용돼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집에서 시장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쿼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규제완화 덕분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로 매출을 올리게 됐고, 손님들은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음식을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74,000여개('14년)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의 소득 및 소비자 편익 증대

#### 개선 전

- 전통시장 빵집, 떡집, 참기름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가능

#### 개선 후

- 즉석판매제조식품을 쿼서비스나 택배 등도 허용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4.10월)

# 147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 외국인근로자 중복신고 통폐합

“저희 회사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고용 변동 발생 때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2중으로 듭니다. 또 취업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개시 신고(사업주)는 고용센터에 해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 신고 일원화를 통해 중복신고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이 줄고 신고관련 시간과 비용도 절감됩니다.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변동, 취업개시 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던 중복신고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현장체감



신고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228억원 부담 경감

#### 개선 전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 신고를,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각각 해야함

#### 개선 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관리시스템 연계로 한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소화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9월), 시스템 연계('14.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0)

고용노동부

# 148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제한 완화

## 택배 진입규제 혁파 맘 편히 배달해요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들은 불법화물운송 단속 위협에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송 물량이 늘어나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해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에 막혀 부족한 차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계약을 체결해 배송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제한하던 규제를 풀어 영세 택배기사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택배용 화물차 1만2,000대의 신규공급을 통해 차량 부족 문제도 해소했습니다.



### 현장체감



'14년 9563대 허가, 부담경감 966억원, 소득창출 1,716억원, 고용창출 5,316개

#### ☹ 개선 전

-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공급 (허가) 금지

#### ☺ 개선 후

- 택배용 화물차 1만 2천대 공급
- ▶ 「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개정('14.8월)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 149

약국관리시 위생복 착용·명찰 패용 폐지

## 약사 가운 벗어 놓으니 마음 놓고 조제해요!

“당신 약사 맞아요? 카운터 직원 아니고?” 동네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A씨는 가운을 벗고 일하러니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약사 가운에 커피를 쏟은 탓에 차마 더러운 차림으로 손님을 맞을 순 없었던 것입니다. 약사가 맞는지 의심하는 손님의 질문을 받자 괜히 위축되고 파파라치가 감시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이제 A와 같은 상황에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약사의 실질업무와 큰 상관이 없는 약사·한약사·실습생의 위생가운착용 의무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운을 벗어놓고도 마음 폭 놓고 조제할 수 있으니, 업무능률이 오르는 건 물론 약국의 자율성 확보로 업무능력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전국 2만 2천개 약국 관리의 자율성 확보

#### 개선 전

-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약국 관리 시 위생복 및 명찰 패용 의무화

#### 개선 후

- 약국 관리 시 위생복 및 명찰 패용 의무 폐지
-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4.7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93)

보건복지부

# 150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대상 품목 전면허용

##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고 빠르게 해외직구 해요!

💬 패션에 관심이 많은 S씨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맘에 드는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신발류는 목록통관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구입 버튼을 눌러 미화 152불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이 국내로 배송되자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란 이유로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고, 물품을 받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구두솔을 실수로 같이 구매한 탓이었습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 완화로 이 같은 국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목록통관이란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선 통관목록(23개 항목) 제출만으로 수입신고(69개 항목)를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목록통관 대상을 구입한 소비자는 신속한 면세통관과 통관 수수료 절감으로 편리한 해외배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해 해외 직구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을 더 싸고 빠르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신속통관 및 年 132억원 가계지출 감소

#### ☹️ 개선 전

• 해외직접 구매 목록통관 대상 : 의류, 신발 등 6개 품목

#### 😊 개선 후

• 목록통관 대상을 모든 소비재로 확대  
(단, 국민건강과 관련된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14.6월)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관세청

# 151

하우스 내 화훼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

## 온실서 키운 화훼, 바로 판매해도 됩니다

화훼를 재배하여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Y씨는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법령 내용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농지법에는 하우스에서 화훼류를 판매하는 것은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으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자칫하면 건축법 제79조의 위법 건축물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 대상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Y씨는 규제개혁신문고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Y씨의 안건을 상정하여 화훼온실(하우스) 부지 내에서 자체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화훼온실의 부속용도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도에 전달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화훼온실 내에서 화훼판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현장체감



하우스와 별도의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부담 경감



### 개선 전

• 화훼 제배용 온실과 같은 대지에 그 온실에서 직접 재배되는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 가중



### 개선 후

• 하우스 부지 내에서 자체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을 판매 하는 경우별도 용도변경 없이 화훼온실 내에서 화훼판매 허용

▶ 「건축민원 제도개선 관련 운영지침」 지자체 시달('14.5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국토교통부  
Korea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 152

산림휴양시설인 ‘치유의 숲’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지정

## 푸르른 숲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힐링 하세요!

“숲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요양원 환우들의 회복에도 도움되고 일반 관광객도 끌 수 있을 텐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니 안타깝네요.” 요양원을 운영하는 W씨의 말입니다. W씨는 숲을 통해 휴양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유의 숲’ 사업을 추진 하고 싶었지만 필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약 50억원이 소요된단 사실에 망설였습니다. 자연휴양림처럼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치유의 숲은 전문휴양업에서 제외돼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근 W씨는 자금 걱정을 덜고 치유의 숲을 조성 중입니다. 사실상 시설기준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처럼, 치유의 숲도 전문휴양업에 포함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생태관광, 힐링관광 추세에 맞춰 규제가 변화함으로써 산림 치유관광 활성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 🎯 현장대기



요양원 등 치유의 숲 사업 추진희망자에게  
자금난 해소 예상

### ☹️ 개선 전

- 산림휴양시설 전문휴양업에 ‘치유의 숲’은 제외됨

### 😊 개선 후

- 기능 및 시설기준이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치유의 숲’도 전문 휴양업으로 인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5.12월)

## 당구 치러 식당에 간다? 기발한 '숍인숍' 대폭 허용!

☞ “식당 내 당구장, 위생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왜 허용을 안 해주나요?” 영업신고를 거절당한 J씨의 의문입니다. 이태원에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J씨는 외국인들 취향에 맞춰 음식점과 당구장의 복합매장 형태인 ‘숍인숍’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영업장은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규제가 부딪혔습니다.

☑️ 조만간 J씨는 당구장과 음식점을 결합한숍인숍을 개업할 예정입니다. 규제신문고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결과 식품접객업에 대한 분리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업종 간 구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일부 업종에만 분리규정을 유지하고, 그 외의 업종에선 시설분리 의무를 대폭 완화합니다. 많은숍인숍들이 벽이나 층으로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선이나 줄 등으로 ‘구분’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 현장대기



식품접객업소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개선 전

-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

### 😊 개선 후

-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별도시설을 설치시 시설간 분리, 구획, 구분 등을 통해숍인숍 영업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 154

자연산물 용기포장시 스티커 사용 허용

## 포장지 대신 스티커 사용하니 살맛나네요!

“포장지 인쇄비가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같아요” 제주지역에서 소규모 연안 어선으로 조업하는 P씨는 소비자에게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주로 진공포장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을 인쇄하는데, 품목당(어종별) 70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는 진공포장 인쇄는 P씨와 같은 소규모 어업 영업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임·축·수산물의 자연산물의 경우에도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씨는 비싼 포장지 인쇄 대신 표시사항 스티커를 활용해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고, 수익이 늘어난 것은 물론 영업 활동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 현장대기



수산물의 경우 2,114개소에서 연간 21억원 절감 예상(건당 120만원→20만원)

#### 개선 전

-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사항을 표시

#### 개선 후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의 경우 용기포장 표시사항을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등으로 사용 가능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15.12월)

# 155

의약품과 비의약품 구별 진열 의무 폐지

## 이제 약과 붕대를 함께 진열해요

☞ 지방에 소재한 S약국은 요즘 고객들이 소독약과 붕대를 함께 찾는 경우가 많아서 두 제품을 나란히 진열하려고 했지만 의약품은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하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을 의외약품과 구분하여 진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 ☑ 하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광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용도별로 진열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진열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편의 증대와 함께 약국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현장대기



전국 2만 2천개 약국의 공간 활용 효율 증진

#### ☹️ 개선 전

- 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 진열토록 의무화

#### 😊 개선 후

- 의약품과 비의약품(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구별 진열의무 폐지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15.9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043-719-2671)



# 156

가구거리 지정기준 완화

## 상점가로 지정된 가구거리, 매출이 쑥쑥!

50개 이상의 가구매장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가구거리를 지역 대표 거리로 특화시키기 위해, 주변 상인들과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를 조직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상점은 점포면적이 작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가구점은 가구 전시를 위한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가구매장과 같이 매장면적이 넓은 점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는 요건을 완화시켜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상인회를 구성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가구거리 현대화를 위한 사업,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현장대기



수도권 인근 50개 이상의 가구매장이 밀집된 지역을 상점가로 추가 지정

### ☹️ 개선 전

• 상점이 지정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지구로 한정

### 😊 개선 후

• 가구 등 특성업종의 상점이 지정기준을 2,000㎡ 초과되는 지역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지구도 가능토록 완화

▶ 「유통산업발전 시행령」 개정('15.6월)

## 인심 좋은 시골민박서 아침해결까지 OK

“우리는 민박집이라 아침을 드릴 수 없어요.” 시골마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H씨는 손님들의 식사 문의에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맛깔나는 음식솜씨로 시골 인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음식업 등록이 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으로선 식사 제공이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H씨의 아쉬움이 풀렸습니다.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일이 허용된 것입니다. 민박을 방문한 국민들은 숙식과 조식을 함께 해결해 편리하고, 농어촌은 관광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1석 2조의 규제개혁이 이뤄진 셈입니다.



민박사업자 잠재적 위법화 해소, 농어촌 연 177억원 경제효과 기대

### 개선 전

- 농어촌 민박에서 조식은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 개선 후

-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조식제공 가능
- ▶ 「농어촌 정비법」 개정('15.1월)



# 5

## 국민 불편. 부담 개선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에 불편은 덜고 생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 158

경찰민원 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

## 경찰민원포털에서 경찰민원 한번에 OK!

“가뜩이나 사고처리로 정신없는데 경찰서까지 가려니 불편합니다” A씨는 불만스럽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 발급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간단한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A씨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거엔 경찰 민원의 온라인 처리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 이제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경찰민원포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한 번으로 각종 경찰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시스템이 구축된 덕분입니다. 각종 경찰민원을 한 곳의 온라인 창구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국민의 편리도 늘었습니다.



### 현장체감



연간 1,200만명의 경찰민원사용자 불편 개선 및 편리성 제고

### 개선 전

- 증명서 발급 등 대부분 경찰민원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온라인 처리기반 미흡

### 개선 후

- 증명 발급, 인허가 신청 등 각종 경찰민원 서비스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온라인시스템(경찰민원포털) 구축
- ▶ 「총 47종의 온라인 민원처리 포털」 서비스('16.1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02-3150-0434)

경찰청

# 159

말기암환자 가정에도 호스피스 허용

##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집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생 보다 편히 보내시게 호스피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평생 살아오신 집을 떠나시게 할 순 없었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M씨는 생업 때문에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 없어 늘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을 덜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히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호스피스를 받으려면 전용 병동에 입원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임종을 맞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암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길 원하나 그동안은 입원형 호스피스만이 운영돼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기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체계를 다양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 현장체감



서울에 사는 A 말기암환자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달 동안 각각 1회, 전담 간호사 8회 서비스 이용, 비용은 5만원(1개월, 본인부담 5%)



### 개선 전

• 전용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만 호스피스 이용 가능



### 개선 후

•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이용 허용

▶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7)



보건복지부

# 160

궁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 지역 개방 확대

## 역사의 숨결 깃든 문화유산,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안내해설사가 되려면 궁이나 능을 부지런히 방문하며 공부해야 하는데 입장료가 여간 부담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 안내해설사가 되길 꿈꾸는 H씨의 말입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고 자주 방문하는 H씨로선 입장료 뿐 아니라 조선왕릉의 일부 능이 비공개된 점도 불만이었습니다.

최근 H씨는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 무료로 궁과 능에 입장하고, 늘 궁금했던 조선왕릉의 사릉과 강릉도 얼마든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를 늘리는 규제개선 덕분입니다. 우선 ‘문화가 있는 날’에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라면 지역 내 궁·능에서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릉과 강릉을 전면 개방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했습니다.



### 현장체감



입장료 할인 및 무료관람 통해 118만5천명  
9억원의 관람료 면제

#### 개선 전

-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입장료 일부감면

#### 개선 후

- 4대궁·종묘·조선왕릉 월1회 무료개방, 만65세이상 노인·외국인 및 현역군인 상시무료관람, 유적기관 소재주민 50% 감면
-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15.11월)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042-481-4909)

문화재청  
Korea Heritage Authority

# 161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 노후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해요!

“나이가 들며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농업 소득만으론 충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오랜 세월동안 자식같이 일궈온 농지를 팔수도 없고요...” 23년 간 영농활동에 전념해온 C씨의 하소연입니다. C씨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을 원했으나 소유농지가 3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해 낙담했습니다.

- C씨가 농지 일부를 팔지 않고도 농지연금을 수령할 길이 열렸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을 3만㎡로 제한하는 농지연금 가입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더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을 수령하며 안정된 노후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65세이상, 농지3ha 초과 경영농가 3만호에 대한 농지연금 진입기회 제공신규가입 전년 대비 20%증가, 월지급금 5.3% 상향에 기여 ('14년 : 96→'15년 101만원)



### 개선 전

- 소유농지가 3만㎡를 초과한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



### 개선 후

- 3만㎡ 이상의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 가입 허용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15.10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림축산식품부

# 162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

##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 맡겨요~

☞ “집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에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워킹맘 P씨의 바람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P씨에겐 어린 딸을 맡길 어린이집을 구하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가장 먼저 알아봤으나, 우선순위가  
낮아 아이를 입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 이제 P씨의 고충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며  
해소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는  
아파트 주민과 타 지역주민이 동등하게 평가받아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 단지 주민에게 입소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 현장체감



S아파트(전북 군산시) 경우 단지 내  
어린이 집을 20년간 시에 무상임대하기로  
주민 동의 얻어 운영 중

### 개선 전

- 기부채납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 부여

### 개선 후

- 기부채납 외에 매입·무상 임대를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우선입소권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5.9월)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84)

보건복지부

# 16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행정보시스템(Tour-PASS) 구축

## 해외여행의 동반자, 투어패스 하나로 모든 정보 OK

“외교부, 법무부, 공항공사 등을 통해 여행정보를 나름 열심히 수집했는데, 미처 예방접종은 체크하지 못했네요.” 오래전부터 꿈꿔온 아프리카 자유여행을 나선 Y씨는 낙담했습니다. 출국 시 황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가나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Y씨처럼 기관별로 산재된 해외여행 규정을 미처 다 숙지하지 못해 겪는 불편이 이전 줄어들었습니다.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어패스가 구축된 것입니다. 여행지와 시기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된 날짜에 맞추면 여행일정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투어패스로 국민불편 해소 및 알권리 충족이 이뤄졌습니다.



### 현장체감



여행자별 맞춤형 통합정보제공으로 여행자 편의성 대폭 개선

### 개선 전

- 해외 여행시 통합안내 부재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불가

### 개선 후

- 세관-외교부-법무부 등 부처별 정보를 통합하여, 해외 여행시 여행자 상황별 맞춤형 정보(계획-출국-여행-입국)를 통합제공
- ▶ 「Tour-PASS시스템 구축」(15.9월)

# 164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후에도 사용 허용

## 이사 전에 쓰던 종량제 봉투, 이사 후에도 꼭- 사용하세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서 산 쓰레기 봉투를 못 쓰나요?” 가정주부 Y씨는 최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Y씨는 이사를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찾다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 구입한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쓰레기 봉투인데 지역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하거나 배출이 가능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자체에 시행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쓰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장체감



울산, 대구북구, 영천시 등 28개 지자체 ('15.11월 기준)에서 전입후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으로 국민불편 해소

### 개선 전

-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

### 개선 후

- 기존의 종량제봉투는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배출이 가능한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부착하면 사용 가능
-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5.8월)
- ▶ 해당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중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0)

환경부

# 165

차량 내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 폐지

## 이제 자동차등록증은 집에 보관하세요!

☞ H씨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당해 교통경찰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H씨는 자동차등록증을 집에 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H씨는 억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H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굳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장체감



등록차량 약 2천만여대에 대한 운전자 부담 경감

### 개선 전

-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개선 후

- 차내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 폐지
- ▶ 「자동차관리법」 개정('15.8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 1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액 납부방식 등 개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액, 개인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취업도 했으니 학자금부터 갚자고 생각했는데, 대출경력을 회사에 알리기가 꺼려지네요.”  
 신입사원 L씨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의 경우 본인이 직접 상환할 수 없고 회사가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단 사실에 괜스레 꺼려졌습니다. 한 편 중소기업 대표 Y씨는 학자금 대출 채무자인 직원이 원천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했기에 불만이 컸습니다.

☑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은 고용주에 의한 매월 원천공제만 인정돼 학자금 대출 채무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원천징수를 채무자가 선택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즉 상환액의 일부를 월급에서 원천공제 하지 않고 개인이 바로 선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15년말 기준) 전체 원천공제 채무자 (59,792명)의 36%(21,366명)가 213억원 선평, 원천공제 대상업체(27,133개) 중 38%(10,221개)가 선평으로 원천공제업무 부담 경감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 개선 전

- 근로소득자의 대출금 상환은 고용주에 의한 매월 원천공제만 인정

### 개선 후

- 근로소득자는 대출금 상환을 원천공제 방법 이외에 원천공제 전 1년치 일시납부 또는 원천공제 잔액 전부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15.5월)

교육부

# 167

글로벌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 환경 마련

## 사람잡는 온라인 결제절차, 원클릭 간편결제로 OUT!

“해외의페이팔,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훨씬 편해질 텐데요...”  
온라인쇼핑을 즐기는 W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트 한 벌을 사려다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Active-X 때문에 결제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했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까지 하려니 시간이 한없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 이제 온라인 카드결제가 간편해집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돼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스트레스의 주범인 Active-X 이용 환경이  
개선되며 편리한 온라인 쇼핑 환경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 현장체감



온라인 쇼핑거래액 대폭증가('14년 3분기 대비 '15년 동기 6.3조 증가)

#### ☹ 개선 전

- 온라인 결제시마다 공인인증서, SMS 인증 통해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Active-X 파일 설치필요, PG사 카드정보 저장 제한

#### ☺ 개선 후

- 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본인인증 사후절차 적용, 카드결제시 SMS인증 등 사전인증 없이도 ID/PW만으로 결제가능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15.5월)

# 168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를 통한 이용자보호

## ‘보이스피싱 게 셋거라’ 사칭전화 원천차단 한다!

“지역번호가 ‘02’로 찍혀있으니 중국에서 온 전화라곤 생각도 못했죠.” 최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를 입은 K씨의 경험담입니다. K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조직의 검찰사칭 전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만약 발신전화만 보고도 국제전화인 줄 알았다더라면 깜빡 속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위험이 줄었습니다. 타인명의로 번호로 불법 발신번호를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경우 국제 식별번호 ‘00X’가 붙거나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에 공공·금융기관 번호를 사칭한 전화 발송 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 현장체감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건수 52.3%,  
피해액 52.9% 감소

### 개선 전

- 자유롭게 발신번호 변조 가능

### 개선 후

- 발신번호 조작방지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5.4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5)



미래창조과학부

# 169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 완화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산재보험 범위 확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801만원 진료비가 나왔는데 그 중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273만원은 비급여 진료비여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선택진료비(진찰,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항목) 및 상급병실료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적용되어 273만원 중 251만원이나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병이 위중하여 상급병실이나 집중치료실에 있는 경우라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진료비 8개 항목 중 의사의 진료행위가 포함되는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MRI 제외)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태가 위중하여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여유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료도 지급합니다.



### 현장체감



연간 약 6만3천여 산재근로자 진료비 부담 188억원 경감

#### ☹ 개선 전

- (선택진료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상태 확인을 위해 특별 진찰을 의뢰한 경우만 지급
- (상급병실료) 재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면서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 ☺ 개선 후

- (선택진료비) 의사의 진료행위가 포함되는 수술, 마취, 진찰 (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MRI 제외) 등을 산재 보험 요양급여로 인정
  - (상급병실료) 재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면서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집중치료실 여유병상이 없는 경우 사용료 지급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15.4월)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

고용노동부

# 170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용자요건 완화

## 청구서만으로 의료비 용자 가능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용자를 받아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관건입니다. 예전에는 병원비를 먼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용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장 병원비를 낼 돈이 모자라거든요. 용자를 먼저 받아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용자는 신청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의료비를 미리 구하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개정을 통해 진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 진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진료비 중간계산서나 청구서 등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의료비 용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현장체감



총 22건에 대해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용자 (총 84백만원) 시행

#### 개선 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용자신청시, 요양기관 등에 납부한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필요

#### 개선 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용자신청시, 진료비 납부 전 청구서나 중간계산서 등으로도 용자 가능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15.4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고용노동부

# 171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걱정 덜었어요!

“실제 수령하는 휴직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크니, 참 불합리하네요”  
 육아휴직 중인 M씨는 불만스럽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엔 별도 상한액이 없어 월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M씨의 경우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가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부담이 한결 덜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인 100만원에 맞춰 보수월액의 상한을 250만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약 1만 7천여 명의 육아휴직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받게 됐으며 출산 친화적 기업환경에도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 현장체감



시행 후 4개월간('15.4~7월) 육아휴직 복직자 17,393명이 27억원 경감 혜택

####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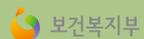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부과

#### 개선 후

-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 기간 중 건강보험료 산정하여 부담 경감

▶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15.4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 172

주택 청약 절차 간소화 및 선택권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주택청약 더 쉬워졌어요!

“인근 지역에 LH의 국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청약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결혼 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 있던 터라, 아내 이름으로 청약하려 했지요.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7일부터는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풀렸습니다.”

이제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청약통장 주택규모 간 운영되어 온 규제가 일정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규모는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제 중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자가 주택 기준도 현실을 반영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 현장체감



약 2천만 청약통장 가입자 혜택

#### 개선 전

- 무주택세대주만 국민주택 공급 ·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주택선정 절차가 복잡(국민주택 13단계, 민영주택 5단계 등)

#### 개선 후

- 무주택세대구성원도 국민주택 등 청약가능, 주택선정 절차 간소화(선정절차를 3단계로 축소 등)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월, 6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국토교통부

# 173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

## 학자금 중복 대출? 신입생이라면 OK!

지난해 대학입시를 치룬 H군은 목표로 하던 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소식을 들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 등록한 대학의 대출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H군은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이런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 동일 학기 중 중복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개선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신입생들은 1차 합격 대학의 대출금을 반환이 늦어지더라도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을 먼저 진행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체감



'15. 1학기에 신입생 총 1,830명에게 156억원 추가 대출 실시

#### 개선 전

-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

#### 개선 후

- 신입생에 한해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15년 신입생부터 적용)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15.1월)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 174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 스키장에서 약국 찾아 삼만 리? 이제 그만!

☞ “간만에 놀러 나왔는데 약국 찾다가 진이 다 빠졌네요.” 모처럼의 휴가를 망친 ○씨는 속상합니다. 스키리조트에 묵던 중 감기 기운이 찾아와 약국을 찾아 나섰지만 새벽에 운영하는 편의점을 도통 찾을 수 없어 심하게 앓았기 때문입니다. 스키장 안에 약을 파는 곳이 없는 게 ○씨는 원망스럽습니다.

- ☑ 종전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콘도·리조트라 해도 구내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으면 십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가 연중무휴 편의점이나 약국을 찾아야만 의약품을 살 수 있어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콘도·리조트에서나 종합감기약이나 두통약, 파스 등 상비약품을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규제개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화순 K리조트 등 4개소에서 판매 중

#### 개선 전

-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 24시간 운영 소매점으로 한정

#### 개선 후

- 24시간 운영 소매점이 없는 휴양콘도미니엄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감기약 등) 판매 허용
-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15.1월)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93)

보건복지부

## 175

범죄경력조회서 영문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

범죄경력회보서,  
손쉽게 발급해요!

“돈 들여 번역하고 공증까지 받으려니, 참 취업하기 힘드네요.” 미국기업에 입사 지원한 A씨는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국문으로 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후 자비로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 ✓ 이제 온라인으로 손쉽게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물론 번역, 공증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취업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엔 국문으로 된 회보서만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후론 언제 어디서나 국·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 HISTORY INFORMATION RECORD

성명 NAME	Hong, Gildong		성별 GENDER	♂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NO.	123456 - 1234567	전화번호 PHONE NO.	555-5555	
주소 ADDRESS	16-1 Jeong-Dong, Jung-Gu, Seoul			
조회목적 INQUIRY OF PURPOSE	✓ 내용확인용 CONTENT VERIFICATION			
조회범위 INQUIRY RANGE	✓ 범죄경력 CRIMINAL HISTORY	✓ 수사경력 INVESTIGATION HISTORY	✓ 미효한경포함 INCLUDING THE LAPSED RECORDS	
회보방법 METHOD	☐ 불함 READING    ✓ 회보서 POLICE CERTIFICAT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위하 같이 신청합니다.

2011. . . . .

신청인 (서명)


**현장체감**


('14.7~'15.7월)

영문범죄경력회보서 발급비용 등 112억원 절감


**개선 전**

-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한글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문으로 번역한 뒤 공증


**개선 후**

- 인터넷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영문회보서 발급 가능
- ▶ '이민·취업 등 해외체류용 영문회보서 온라인 발급' 개정 ('15.1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02-3150-3575)


**경찰청**

# 176

사내대학 학칙 개정시 보고의무 폐지

## 사내대학도 학칙개정 보고의무 폐지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일반대학의 경우 학칙을 개정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대학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고, 세부 사항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도 큼니다.”

-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사내대학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체감



사내대학의 행정 효율화 및 자율성 강화

#### 개선 전

- 사내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

#### 개선 후

- 사내대학 학칙 개정시 교육부장관 보고 의무 폐지
-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14.12월)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044-203-6880 / 044-203-6885)



# 177

입학 전 경력을 사내대학 학점으로 인정

## 졸업학점 걱정 없이 주경야독!

“낮에는 업무부담, 밤에는 학습부담으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심각하게 휴학을 고민 중입니다.” 만학도 H씨는 못 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사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느라 졸업학점 취득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요즘 H씨는 부담을 덜고, 수업에만 집중합니다. 그간의 산업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근무경력이 아닌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만이 사내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근무했던 경력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사내대학의 산업체 경력인정에 따라 일·학습 병행에 따른 사내대학 학생의 부담 완화

#### 개선 전

• 학칙에서 규정한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수강해야 졸업

#### 개선 후

• 사내대학 입학전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학점의 1/5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14.12월)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044-203-6880 / 044-203-6885)



# 178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 단축

## 새 집으로 떠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이 짧아졌으니까!

☞ “고양 원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시세를 초과해서 시세차익이 없었지만, 거주의무기간이 있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거주의무 부담을 덜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의 투기방지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해당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1~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주택이 시세차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불합리한 규제라는 점을 개선하여 거주의무기간을 0~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현장체감



25개 공공주택지구 의무거주 부담 완화  
(서울 강남, 성남 여수, 하남)

### 개선 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분양시 1~5년의 의무 거주기간 부과

### 개선 후

- 의무 거주기간을 0~3년으로 단축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4.12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8)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79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던 연비 관리제도 통합

## 헛갈리는 자동차 연비는 이제 그만!

“부처마다 자동차 연비 정보를 다르게 제공하니 도대체 무얼 믿어야 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D씨는 어느 부처의 말을 신뢰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편, P자동차 제작사는 신차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개발비 증가 및 양산시기 지연으로 고민 중입니다. 정부 부처별로 다른 연비규정과, 업계 중복규제 때문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관리하며 부처별로 연비측정 절차가 통일되지 않았고 중복규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비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판매된 자동차의 연비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아울러 연비 신고를 원스톱으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동 신고포털을 운영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연비관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혼선도 줄이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연비 표기에 대한 소비자, 제작사 혼란 해소,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 면제에 따른 연간 최소 3억원 예산절감

### 개선 전

- 부처별 연비 시험방법 별도 운영, 부처별 연비 사후 관리 별도 시행, 제작사가 부처별 별도 연비 신고

### 개선 후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 측정 기준을 통일하고, 사후검증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를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14.11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3)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80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 인터넷 주문으로 간편하게 건강 체크하세요!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시험지는 꼭 약국에서 사야하나요?”  
콜레스테롤 수치 고위험 진단을 받은 Y씨는 꾸준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시험지는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참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Y씨는 이제 번거롭게 약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시험지를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는 의약품으로, 이를 이용한 측정분석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두 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시험지도 측정분석기처럼 의료기기로 바뀌며,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한 원스톱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신진단기기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콜레스테롤 검사지 등 판매가능 업소가  
46,623개(21,058개소→67,681개소) 증가

#### 개선 전

- 콜레스테롤 측정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외 판매 금지

#### 개선 후

- 콜레스테롤 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함으로써 약국 외 판매·구입이 가능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4.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식품의약품안전처

# 181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채취 갱신기간 연장

## 임산물 채취 갱신기간, 고로쇠수액에 대한 편견을 벗다!

“다른 국유림 대부는 5년마다 기간을 갱신하는데 유독 고로쇠수액 채취만 3년동안 갱신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요? 고로쇠수액 채취업자들이 나무를 마구잡위로 훼손한다는 편견 때문인 것 같아 억울합니다.” 국유림을 대부받아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H씨의 말입니다. H씨와 동료 고로쇠 채취업자들은 모두 나무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잘 지켜서 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로쇠 채취업자들만 3년마다 대부기간을 갱신해야 한다는 건 차별적이라고 H씨는 주장합니다.

이제 H씨의 억울한 마음이 풀렸습니다. 채취구멍 수를 제한하는 등 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점을 고려해 고로쇠 채취업의 대부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국유림 대부 갱신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했던 고로쇠 채취업자들의 차별 문제가 해결되며, 영세 임가가 더욱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다른 국유림 갱신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형평성 제고

#### 개선 전

- 수액채취 허가·양여 기간과 갱신기간을 각각 3년 이내로 제한

#### 개선 후

- 수액채취 허가·양여 기간과 갱신기간을 5년으로 완화
- ▶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 개정('14.11월)

산림청 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6)



# 182

자동차정비업 표준공임제 도입

## 자동차 정비공임 표준을 확인하니 바가지 쓸 걱정 뚫!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가격에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비용 기준을 모르니 뭐라 따질 수도 없네요.” 직장인 P씨는 황당했습니다. 차량점검 후 계산서를 살펴보니 교체시간이 30분이나 걸렸던 엔진오일의 공임비보다 5분 만에 수리를 끝낸 레귤레이터 공임이 비쌌던 것입니다. 혹시 바가지를 쓴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P씨는 답답했습니다.

☑ P씨처럼 자동차 정비공임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몰라 답답했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자동차정비업 표준공임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차량의 수리비는 부품값과 공임이 더해져 계산됩니다. 이때 수리에 드는 인건비인 공임에 대해선 통일된 표준이 없던 탓에 정비용과 과다 청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표준정비시간 및 주요 정비작업에 따른 공임을 자동차 정비업체에 게시하도록 했고, 앞으로 표준정비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을 비교하며 수리비 청구 내역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 현장체감



'15년 제도 시행 이후 35,000개 정비업체에서 표준공임 관련 정보 게시, 국내 제작사 약 20%가 홈페이지 게시

### 개선 전

- 일반 정비업체는 통일된 표준공임이 없어 바가지요금 대표 업종으로 인식

### 개선 후

- 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 인쇄물로 공개
- 정비사업자의 표준시간,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0월, '14.12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83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 지역번호판, 이사 후에도 꼭~ 사용해요!

“바쁜 직장생활 중 따로 시간을 내 교체비용까지 부담하며 꼭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나?” 서울에 살던 K씨는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지역번호판을 달고 있던 이유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K씨의 자동차는 녹색 지역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에 흰색 전국번호판으로 바꿔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진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한 전국번호판(전국번호판(○○가○○○○, 흰색)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직장생활 등으로 미처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K씨처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의무를 폐지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현장체감



지역번호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번호판 교체비용 약 29만원 부담 경감



### 개선 전

- 지역번호판(이륜차 포함) 소유자의 전입 신고 시 변경등록 신청 및 전국번호판 변경 의무 부담



### 개선 후

-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지 자동변경 및 지역번호판을 그대로 사용 가능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0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 184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 면세점 알뜰쇼핑족에게 반가운 소식!

“얼마 전 카메라가 망가져 새로 사야하고,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400달러 한도 내에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에요. 카메라를 포기해야 할까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던 P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됐단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맘을 놓았습니다.

- ✓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26년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해외여행객 15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기록하는 추세에 따라 규제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상향된 것입니다. 내년부턴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여행객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현장체감



인천공항 입국자 만족도(73%), 현실에 맞는 면세한도 조정으로 국민의 잠정적 범위만 사례근절 및 관리인력의 공항보안 집중환경 마련

### 개선 전

- 해외여행자 1인당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96년 이후 18년간 400달러로 동결

### 개선 후

- 해외여행자 1인당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400달러 → 600달러)
- ▶ 「관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14.9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185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 다니던 직장 폐업해도 밀린 임금 걱정 덜었어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조그마한 회사라 재무제표, 임금대장 등 자료가 부실하여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체당금 지급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영세한 사업장은 재산관련 자료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임금지급능력 판단에 관한 특례를 두어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체감



연간 1,540여개 사업장 12천여 명의 체불근로자에게 혜택

#### 개선 전

- 체당금지급 조건인 「임금지급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1개월 이상 사업주 소재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 재산을 회수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릴 경우' 2가지로 제한

#### 개선 후

- 체당금지급 조건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14.9월)

# 186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 보관창고에 화장실 설치 허용

## 그린벨트 내 농업용 창고서 '속 편하게' 화장실 가세요!

“합법적으로 설립된 내 일터에서 일하는데,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운영하는 J씨의 불만입니다. J씨는 창고의 창고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던 이유만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 보관 창고 설치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별도의 부대시설은 허용치 않는 규제 때문입니다. 창고에서의 하역 등의 작업이 길어질 때마다 J씨는 생리현상으로 곤란을 겪었고, 창고설립은 허용되는데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한 화장실은 짓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J씨는 더 이상 작업 중 고역을 겪지 않습니다. 얼마 전 창고 안에 화장실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 내 주민들이 농업용 창고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허용 규모와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장실 설치를 허용해 국민 생활의 편익을 키웠습니다.



### 현장 체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농업용 창고 이용 불편 해소

### 개선 전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수산물 보관창고 내 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

### 개선 후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의 허용 규모와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간을 화장실로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창고 내 화장실 등 설치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14.9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87

도시가스요금 카드 납부방식 확대

이제 가스요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요즘 같은 시대에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했던 S씨는 카드를 가지고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했으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결국 현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사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요금 정산 및 연결비를 이사 당일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 이제, 도시가스사와 신용카드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토대로 전국 도시가스사들은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확대했습니다. 도시가스사 방문결재의 경우 9개 신용카드사의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를 허용했으며 이사당일 도시가스 관련 제비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장 체감



가스사용 가구의 9% 수준인 140만 가구  
(’15년) 카드로 요금 결제 중



## 개선 전

-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에 직접 방문시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개선 후

- 인터넷, 자동이체시에도 신용카드 사용 허용
- ▶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 협조(’14.8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9)



산업통상자원부  
MOTIE

# 188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 사업장 건보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현금으로 큰 돈을 납부하려니 부담이 큼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넘겨 연체금을 내게 된 중소기업 대표 C씨의 하소연입니다. 5인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에게만 허용된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식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C씨의 바람입니다.

이제 C씨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모든 사업장에서 월 1천만원까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규제개선 덕에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 졌고 부담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가입자의 신용카드 납부액이 1.7배 증가

#### 개선 전

- 지역보험료 및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카드납부 가능
- \*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

#### 개선 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모든 사업장까지 카드납부 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4.8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보건복지부

# 189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 요즘 대세 해외 직구! 반품도 일사천리!

“돌려받는 세금에 비해 통관수수료가 더 비싸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대학생 Y씨는 겨울 코트를 더 싸게 사려고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트를 받아 보니 생각했던 재질과 달라 반품하려 했지만 번거로운 일이 한돌이 아니었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관세사에게 환급 절차를 의뢰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날리게 됐습니다.

Y씨 같은 해외 직구족들의 고충이 풀렸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이로써 관세 환급이 손쉬워지고 불필요한 통관수수료 부담도 해소됐습니다.



### 현장체감



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 등 연간 약 1,000만원 부담 경감

#### 개선 전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출업체만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이 가능, 일반 개인은 관세사를 거쳐 환급

#### 개선 후

- 개인의 경우에도 직접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가능
-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7월)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관세청

# 190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 합격해서 좋고, 수수료 없어 더 좋고!

“다른 확인서는 무료인데 왜 합격확인서만 돈을 내야 발급 되나요?” 정보통신기사 시험에 합격한 C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사한 확인서류인 접수확인서, 응시확인서, 수수료 납부확인서, 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경우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었기에, C씨는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스템 전산화로 발급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고 기술자격 취득자들의 편리를 늘렸습니다.



### 현장 체감



연간 약 37만건의 (3억7천만원) 수수료 면제 혜택

#### 개선 전

- 국가기술자격 시험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개선 후

-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 19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 간소화

“자동차 보험 설계사는 사고명의자를 대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주는 일이 많은데, 사고명의자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기가 힘들어요. 신분증이야 사고명의자에게 요청해 빌리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귀찮은 제도를 왜 그냥 놔두는 거죠?”

인감증명서 제출은 대리인의 보험금 부정 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제도이나, 보험금은 지급 대상자의 직접 확인 없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사고당사자와 보험업 종사자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체감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비용 등 약 12억원의 비용절감(개선 이후, 대리인 발급건수 36,713건)

### 개선 전

- 보험사 등 대리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 개선 후

- 대리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 제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4.6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42)



경찰청

# 192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 미국보다 더 미국 같은 어학캠프,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애도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비싼 금액에 엄두를 못 내겠어요.”  
L씨와 같은 입장인 학부모들의 고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학교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여러 대학이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여학실, 기숙사 등의 시설과 우수한 강사들을 활용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를 운영하려 했으나  
규제로 인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선  
이후론 대학 내 어학캠프가 활성화됐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수강료 감면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도 비싼 사교육비 부담 없이 국내에서 양질의  
어학연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 현장체감



'14년 겨울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시  
총 27개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비용을  
전액 무료 지원 또는 감면 조치(1,119명,  
약 6억7천만원)

#### 개선 전

- 초·중등학생 대상, 대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 금지

#### 개선 후

- 방학중 대학교 시설내 어학캠프 운영 허용
- ▶ 「어학캠프 운영을 위한 MOU 체결기준」 안내('14.5월)

# 193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 폐지

## 정년 앞둔 중년들, 청원경찰로 제2의 인생을!

“50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하고 청원경찰직에 지원해보려고 평소 업무상 자주 가던 회사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직에 50세 이상은 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왔습니다.”

2014년 3월 18일부터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50세 이상 중년들에게도 청원경찰 채용의 문이 열렸습니다.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 폐지를 통해 많은 중·장년에게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 현장체감



50세 이상 중·장년 142명 신규임용 ('14년 48명, '15년 94명)

#### 개선 전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연령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제한

#### 개선 후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서 상한연령 50세 미만을 폐지

▶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14.3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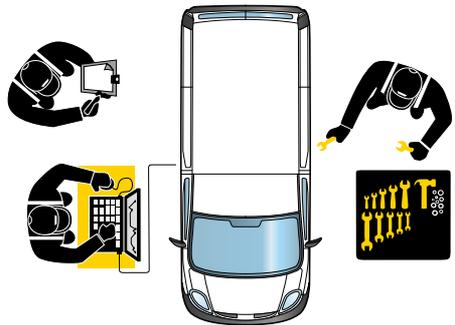
# 194

승합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정

## 중형승합차 정기검사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 평소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회사원 B씨는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고 5년 된 11인승 중형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B씨는 얼마 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차량이 5년을 초과하는 중형승합차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기존에 타던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았는데 6개월마다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에 규제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과거에 비해 차량 성능이 향상된 점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중형승합차 등의 검사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차령 5년 초과 기준을 8년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형승합차 등 차량 소유자들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현장대기



승합자동차 소유주들의 수검 불편 해소 및 검사 수수료 부담 46억원 완화

#### ☹️ 개선 전

•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차량 5년까지는 매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으나, 5년을 초과한 경우 6개월마다 검사

#### 😊 개선 후

• 중·대형승합차의 경우 차량 5년까지는 매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으나, 5년을 초과한 경우 6개월마다 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 상반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49)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195

수영장 이용자 불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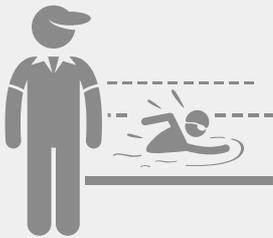
## 각자의 일정에 따라 마음껏 수영하세요!

☞ A씨는 체력관리를 위해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는 회원전용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준비체조를 마치고 수영장에 들어간 A씨는 수영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수영장 안전요원으로부터 수영장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안전 및 수영장 관리를 위하여 매 1시간마다 이용자를 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빨리 수영을 마치고 약속장소로 가려던 A씨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일괄 규정으로 불필요한 대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수영장에 대한 획일적인 규정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당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호텔 등 일정범위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점검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A씨와 같은 불편을 겪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 🎯 현장대기



회원제 수영장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 ☹️ 개선 전

- 수영장 침전물 및 사고유무 확인을 위해 모든 수영장은 일률적으로 매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 😊 개선 후

- 호텔, 회원제 수영장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 점검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16.2월)

# 196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이제 결혼이 코앞인데 신혼집 구할 걱정이 큼니다. 수도권 전세값을 감당할 형편도 안 되고 행복주택 청약도 할 수 없으니, 직장에서 먼 곳에 입주하는 수 밖에요...” 결혼을 앞둔 H씨는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임차료로 지어지는 도심형 아파트인 행복주택에 청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마친 1년차 신혼부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낙담했습니다.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행복주택이지만, 기존엔 예비신혼부부가 행복주택 입주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신혼부부의 청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이뤘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행복주택에서 신혼살림을 꾸림으로서 주거부담을 덜게 된 것입니다.



### 현장대기



예비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주거부담 경감

#### 개선 전

- 예비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청약 대상자에서 제외

#### 개선 후

- 입주 전까지 혼인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 행복주택 청약 허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 197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확대

##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웹 환경, 더 널리 확산됩니다!

“저도 다른사람들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료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 병원 홈페이지는 제겐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마찬가지로요.” 병원을 운영하는 C씨는 시각장애인 환자의 이러한 불만에 당황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장애인 고객을 배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갖춰야겠다고 다짐한 C씨는 생각보다 높은 웹 접근성 인증 수수료에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 2015년부터 고용인 30명 이상의 모든 법인은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인증 획득 수수료가 높은 탓에 많은 사업장들이 이를 따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C씨의 병원과 같은 소규모 단체 및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규제개선이 이뤄졌고,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 장애인 웹 이용환경 개선에 동참할 길이 열렸습니다.



### 현장대기



전년대비 '15년 수수료 10%절감,  
'16년 2천개 기관 5억원 절감 예상

#### 개선 전

- 고용인 30명 이상 법인은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확보가 의무사항이나, 인증수수료가 부담

#### 개선 후

- 법인·단체 규모에 따라 웹접근성 인증 수수료 인하(평균10% 인하)
-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표준 지침」 재정('15.10월, '16.1월)

# 19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을 완화

## 아는 것부터 시험 보니 공부재미 솔솔!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알아보니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개 과정을 차례로 응시해야 했습니다. 국어, 국사, 외국어 시험 등을 먼저 합격해야 제가 업무를 통해 배운 회계원리나 마케팅조사 등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학업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모든 시험에 선택적으로 응시가 가능해, 저도 대학졸업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 ☑ 그동안 독학학위는 교양과정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는 학습자의 학위취득 소요기간을 길게 만들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열의마저 꺾고 있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제외한 각 과정별 시험에 순서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어 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 현장대기



독학학위 중도 포기 예방 및 취득 소요기간 단축 (1년 이상)

#### ☹️ 개선 전

- 독학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개 과정의 시험을 단계적으로 합격 필요

#### 😊 개선 후

- 독학학위 취득하기 위한 4개 과정 시험을 1, 2, 3단계는 학습 여건에 따라 선택 응시토록 변경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15.9월)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7)



# 19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 대기업 근로자, 육아휴직자도 직업능력훈련 지원

“대기업 과장인데 육아휴직 중이에요. 복귀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큼니다. ‘잠시 휴직’이 ‘영원한 휴직’이 될까 걱정이 많아져 여기저기 알아보니 휴직기간 중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훈련만 잘 받는다면 복귀 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연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50세 이상 근로자로 제한되던 지원대상에 대규모 기업의 40대 중반 이후 근로자, 육아휴직자들도 포함되어 이직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대기



대기업 육아휴직자 4만 여명에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40대 중반 전직예정자 약 9,300명 훈련 지원 예상

### 개선 전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50세 이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연 200만원 한도(5년간 300만원)로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 개선 후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45 ~ 49세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연 200만원 한도, 5년간 3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7월)

# 200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립시 지원요건 완화

## 지자체도 기업들도 한 마음! 직장과 어린이집을 한 곳에!

“공장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을 텐데요...” 동탄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J씨의 바람입니다. J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느라 매일 긴 거리를 돌아 출근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리란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일 중소기업 입장에선 재정부담과 장소부족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단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J씨는 든든합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산단 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독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덕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이 대폭 해소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 현장대기



‘17년도까지 산단내 공동어린이집 50개소를 지자체 협업모델로 개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약 5,000명영유아 보육 가능 예상

#### 개선 전

-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 지원

#### 개선 후

- 산단내 중소기업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 대기업·지자체3대학 등의 공동 참여시에도 정부지원(최대 15억원)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개정(‘15.4월)

# 집필진

##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규제개혁 업무  
총괄 조정



## 이창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규제개혁 제도·법령  
비용분석 등 총괄



## 길홍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규제 혁신  
기획과제 총괄



## 민용식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 신설·강화 규제  
심사 총괄



## 한상원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부단장
- 기업애로 등  
손톱밀가시 총괄

